

긴급토론

위기의 민주노동당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 2008년 2월 1일(금) 오후 2시

장소 : 국회 도서관 지하1층 대강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진행 순서

1. 민중의례

- 진행자 :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

2. 참가자 소개

3. 주관단체 대표 인사말

- 이 석 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한 도 숙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김 덕 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의장)
- 이 승 호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의장)

3. 정치토론회 사회자 소개

- 손 석 춘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정치토론회 순서

토론 주제 : 위기의 민주노동당 어떻게 할 것인가

1. 발제

<발제 1> “민주노동당 지지하는 대중단체 입장에서”

- 이 정 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치위원장)

<발제 2> “민주노동당 비상대책위원회 입장에서”

- 염 경 석 (민주노동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5. 지정토론

- 김 창 현(민주노동당 전 사무총장)

- 주 대 환(민주노동당 전 정책위의장)

- 김 인 식(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중구위원장)

- 최 형 권(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

- 이 영 희(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치위원장)

- 박 희 진(한국청년단체협의회 부의장)

6. 자유토론

7. 종료 및 뒷풀이

목 차

<발제>

1. “민주노동당 지지하는 대중단체 입장에서 5
- 이 정 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치위원장
2. “민주노동당 비상대책위원회 입장에서
- 염 경 석 민주노동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토론>

1. 민주노동당 위기 진단과 해법 :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 김 창 현(민주노동당 전 사무총장) 1
 2. 주인 노릇 주인답게 하십시오!
- 주 대 환(민주노동당 전 정책위의장) 6
 3. 비상대책위원회 혁신안에 대한 입장
- 김 인 식(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중구위원장)
 4. 민주노동당 사태에 대한 전농의 입장
- 최 형 권(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
 5. 민주노동당 사태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 이 영 희(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치위원장) 3
 6. 민주노동당 혁신은 단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 박 회 진(한국청년단체협의회 부의장) 7
- <첨부자료 > 공동성명서 59
2월 3일 임시당대회 자료집 중 안전 1, 2 6

민주노동당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대중단체의 입장에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치위원장 이정옥

위기의 민주노동당,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는 2007년 대선 이후 우리 모두를 무겁게 하는 화두이다. 민주노동당이 맞고 있는 위기상황은 대선득표 3%, 참패라는 결과 속에서 명확히 규정되고 진단되고 있다. 물론 민주노동당 3% 득표, 대선 참패라는 결과는 대선에서의 민주노동당 활동 평가뿐 아니라 2004년 이후 지난 4년간의 민주노동당 활동에 대한 국민대중의 전면적 평가라는 지점에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바이다.

당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의 사퇴 이후 이루어진 비대위 체제의 출범은 민주노동당의 위기상황을 제대로 진단하고 민주노동당이 새롭게 혁신하며 대안과 전망을 제시하는 모습으로 거듭나 총선에 힘있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당원들의 바람의 결과이다. 한편 비대위 출범 이후 예상보다는 빨리 당 활동에 대한 평가와 혁신방안까지 포함된 임시대대가 2월 3일로 예정되어 있다.

당의 위기상황에서 논의되는 혁신, 쇄신은 지역과 도, 중앙 등의 당 내부와 당을 지지하는 대중단체 등 당 안팎의 총체적인 평가에 기초해서 힘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비대위가 제출하고 있는 당 활동에 대한 평가 지점이나 혁신의 내용에 있어 두, 세가지 지점에 있어서는 당안팎의 이견이 있고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과 토론의 자리를 통해 논의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토론회는 당이 새롭게 혁신하고 나아가야 할 지점에 대해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대중단체의 입장에서, 민주노동당이 기반하고 있는 중심축인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을 대표하고 있는 단위의 입장에서 토론하고자 마련된 것이며 이 자리가 당의 위기를 진단하고 극복하는 진지한 토론과 소통의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1. 위기에 대한 진단

1) 대선 결과 및 지난 4년에 대한 평가

보수-개혁-진보의 3자 구도를 형성하면서 집권가능한 대안정당의 위상을 확보하고 18대 총선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애초의 목표와 거리가 먼 대선 참패의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선 전체를 관통하는 큰 흐름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지는 지난 10년에 대한 국민적 반발과 저항감, 신자유주의 공세 속에서 진행된 극단적 양극화, 비정규직, 고용 문제

등 서민 생존의 문제에 대한 절박감을 가진 국민대중 다수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대안세력의 부재(부재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민주노동당의 능력, 대안을 제시한다고는 하나 당선은 불가능한 정당)등으로 인해 이명박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다는 것임.

-신자유주의의 공세 속에서 빚어진 국민다수의 민생문제가 최대쟁점이 된 대선에서 국민다수는 경제문제를 심화시킨 직접적 대상자인 노무현정권을 심판하고 청계천, 서울 버스 교통문제를 통해 보여지듯 강한 추진력을 통해 경제적 능력을 가진 것으로 이미지화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게 표를 던진 것임.

--사표심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지만 실제로 지자체 선거, 총선과 달리 대선에서는 상당한 지지율을 확보한 정당이 아니고서는 표를 쉽게 던지지 않는 국민정치의식의 벽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주노동당이 진보대안정당, 수권정당으로서 선전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음.

--이러한 부분이 있음에도 민주노동당이 대선에서 참패하게 된 자체 원인을 가벼이 여길 수 없음.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특히 핵심적으로는 민주노동당이 대선의 핵심쟁점이 되었던 민생문제를 대선의제화하고 선점하지 못한 점, 신자유주의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부각시키지 못한 것, 대안을 제시하고 실현할 수 있는 정당으로 다가서지 못했다는 것임.

--민주노동당 대선 참패에는 전통적 지지층인 조직대중(노동자, 농민 등)을 실질적으로 조직하고 집중시키지 못한 측면도 작용함. 이는 특히 민주노동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는 대중조직들이 자체내의 정치의식을 높이기위한 정치사업들을 더욱 강화해야함은 물론이고 조직노동자들의 여론영향력을 높여내고 농민, 빈민들의 지역정치력이 강화되어야 함을 의미함.

--또한 민주노동당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지를 표해야 할 자영업자, 비정규직, 20대층을 향한 실질적 집중이 필요하며 여성, 생태, 환경대안가치의 심화와 확장이 중요함.

--한편 2004년 4. 15 총선에서 정당 득표13%, 총선 직후 20%지지율 등이 노무현-열린우리당의 지지율 하락과 함께 맞물려 하락하는 결과에 대한 분석으로 지난 4년 간의 당의 활동이 개혁세력과의 차별화에 성공하지 못한 지점이라는 평가에 동의하면서도 개혁세력에 대한 국민여론의 지지율 상승과 민주노동당의 지지율 상승이 맞물렸던 국민들의 정치인식에 대한 분석이 면밀히 이루어져야 함.

--대선평가나 2004년 총선 이후에 대한 평가는 보다 총체적으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2) 비대위가 제출한 당 내 쟁점사안, 분단논란에 대하여

민주노동당이 맞고 있는 위기는 대선참패라는 최근의 결과까지를 두고 집중되고 있는 진단과 해법에 대한 입장들이 엇갈리고 있는 지점들에서 당 안팎을 통해 두루 소통되고 토론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오기도 하다.

비대위가 제출한 혁신안은 시간의 촉박함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신중한 고려가 더욱 필요하지 않았는가 판단된다. 하나의 예로 최기영, 이정훈 당원에 대한 제명은 비대위의 판단에 의거해 해당행위를 명시하기 위한 결정이라 하더라도, 그 뒤에 따라붙은 “당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훼손시키려한 북한당국에 엄중 항의하며 이후 북한 당국은 남한의 진보 정당운동에 대한 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는 문항은 정치적 고려가 신중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 판단된다. 이를 당대회의 안건으로 하기 위해서는 북한당국이 이 사건에 구체적으로 개입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나, 그것을 증거하는 자료는 어떻게 제출될 것인가? 친북이미지 청산에 지나치게 집착한 결과이지 않은가? 보다 심각한 것은 이미 이 내용이 각 방송과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임시당대회 대의원들의 판단과 무관하게 대북 메시화되었다는 사실은 여러 면에서 신중하지 못한 판단의 결과가 될 것이다.

(1) 민주노동당의 편향적 친북이미지 문제있다는에 대한 입장

-- 지난 수십년간 정치군사경제적으로 직, 간접적 개입을 계속해왔던 미국의 강력한 영향력이 현실로 존재해왔고 지금도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의 통일은 민족통일이라는 당위의 측면에서만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공존, 민생해결, 자주성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평화와 통일은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 속에서 중요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고 민주노동당이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정당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서는 것은 당연한 임무이다. 또한 진보적 대중단체들의 중요한 사업으로 자주평화통일운동이 자리잡은 지 오래다.

민주노동당은 국민대중에게 희망과 대안을 제시하고 실현하는 정당으로서 평화와 통일을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과 전망을 의제화해야 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최근 불거져 나온 당내 쟁점사안 중 편향적 친북행위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은 당안팎에서 여러 어려움 속에서 실천해왔던 통일운동에 대한 왜곡과 국민적 오해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어 깊이 우려스럽다.

비대위 출범 이전부터 분당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세력들의 조선일보 인터뷰 등을 통한 언론화, 당내의 친북이미지 불식논쟁은 비대위가 ‘중복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입장과 관계없이 그동안의 평화통일을 위한 진보진영의 운동과 민주노동당의 활동이 왜곡되는 것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북을 적대시하는 반복논리와 싸워야 할 평화통일정당 안에서, 보수세력과 동일한 논리로 당내부를 공격하는 것은 민중들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북한 핵실험에 대한 당내의 입장 정리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비대위의 진단은

남북평화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미국에 대한 문제의식이 배제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국가보안법이 현존하고 있고 본인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일심회 사건의 관련자들에 대한 제명처리는 소명기회가 주어지는 당 내 해당 기관에 의해 보다 신중히 다

뤄져야 할 것이다.

(2) 당내 패권주의 및 민주주의의 문제

당내 패권의 문제, 민주주의의 문제는 민주노동당에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지점이며 당내 쟁점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시급히 극복되어야 할 문제이다.

반성해야 될 지점이 분명 있다.

대선참패, 위기, 혁신을 논하는 지금, 그동안의 당내 노선의 차이를, 사실에 근거하여 제대로 이해하고 소통하고 통합시켜나가는 실질적 노력을 해야 한다.

정파이익의 관점이나 정파의견의 관철이 아니라 국민대중과 함께 하는 진보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상과 노선의 입장에서 토론하고 차이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소통해 나가야 한다.

(3) 분당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고 아끼는 대중들과 당원들은 3%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당에서 분당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황당해하거나 답답해하고 있다.

대선 때 후보활동에 대해서는 미온적이던 민주노동당 언론보도도 대선 전후 벌어지고 있는 민주노동당 관련내부문제에 대해 연일 대서특필되고 있다.

당내 존재했던 정파 패권의 문제, 활동방향에 대한 이견 등이 너무나 커 같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이해되는 측면이 없는 바 아니다.

그러나 차이에 대한 진단과 당내 문제에 대한 토론, 소통을 위한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그것이 분당을 추진하는 것에 쏟고 있는 힘의 얼마만큼이나 진행되었는가 돌아봐야하지 않겠는가?

심상정 비대위 또한 분당 추진세력에 대해 보다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했다. 혁신안이 통과되어도 탈당하겠다는 세력들에 대해 애초부터 불분명한 태도를 보인 것은 심히 유감이다. 비록 며칠 전 이들에 대해 ‘탈당하는 것이 정치적 도의에 맞다’라고 언급하였으나 시기상으로 너무 늦은감이 있다.

비대위도 밝히는 바 민주노동당을 혁신하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흐름과 관계없이 당내에 남아 분당을 선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2. 위기를 진정한 기회로 삼아 혁신하고 새롭게 나아가야 한다.

지금 당이 처한 상황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삼자’는 각오는 관성적 흐름에서 쉽게 던지는 말이 아닐 것이다.

비록 3% 지지라는 결과로 나타났지만 우리 당을 지지한 기층 대중과 서민들이 있고 우리들의 삶은 이명박 정권하에서 더욱 힘든 고통과 위기를 맞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선에서는 표를 주지 못했지만 지역정치,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선전하기를 바라는 대중들의 바람이 있다.

비정규직, 사회공공성의 전면적 파괴, 한미FTA 국회비준 등 신자유주의 공세를 전면화하고 있는 이명박정권에 대항하는 대안정당 민주노동당이 총선에서 힘있게

실질적인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고 지역을 책임지는 정치세력이 돼야 한다.

중앙당이 큰 틀에서 정책과 전망을 통해 공중전을 펼쳐나간다면 지역은 지역민들의 생활과 신뢰를 높여나가고 그것이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로 상승, 확산되어가는 중심단위가 될 수 있도록 조직력, 정치력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비대위가 밝히다시피 제 2창당의 각오는 중요하고 현실화되어야 한다.

제 2창당은 선언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제2창당운동이 실질화되기 위해서는 당의 위기진단과 혁신방안에 대해 보다 열린 토론과 소통이 전제되어야 한다.

전농과 전여농은 대의원총회 등을 통해 4월 총선을 농촌에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들을 밝히고 있다. 민주노총 또한 다르지 않을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삼고 혁신하고 전진하며 총선에서 승리하는 민주노동당을 당원들의 손으로, 노동자, 농민, 빈민 등 다수 국민대중의 힘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혜와 노력을 다해나가야 할 때이다.

토 론 문

1. 민주노동당 위기 진단과 해법 :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 김 창 현(민주노동당 전 사무총장)

2. 주인이 주인 노릇 당당하게 하십시오!

- 주 대 환(민주노동당 전 정책위의장)

3. 비상대책위원회의 혁신안에 대한 입장

- 김 인 식(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중구위원장)

4. 배타적 지지단체로서의 전농의 입장

- 최 형 권(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

5. 민주노동당 사태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 이 영 희(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치위원장)

5. 배타적 지지단체로서의 한청의 입장

- 박 희 진(한국청년단체협의회 부의장)

민주노동당의 위기진단과 해법

우리는 어디로 가야하는가?

- 김 창 현(민주노동당 전 사무총장)

머리말

우리는 대선 이 후 눈물어린 반성과 혁신의 계기를 갖지 못한 채 엉뚱한 “중 북주의” 논쟁에 휩싸여 당의 위기를 재도약의 발판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 왜 민주노동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의 지지와 사랑을 잃고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을까? 다양한 원인 진단이 있고 또 극복대안이 제시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이 글은 대선 이 후 벌어진 당내 논쟁과 당 대회를 앞둔 시점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출한 혁신안에 대한 비판하는 것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무엇보다 당내 다수파인 자주파의 반성과 당의 수습을 위한 진정한 길이 무엇인가를 진솔하게 밝히고 싶었다.

물론 당면한 상황이 당의 분당으로 이어 질 수 있을 만큼 엄중하기 때문에 비대 위가 제출한 대선 평가와 위기진단, 혁신안을 진지하게 살펴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나는 이 발제문을 통해 현안을 넘어 또 어느 한 정파의 입장을 넘어 당의 미래를 향한 혁신의 내용을 담고자 노력하였다.

이 글은 첫째, 자주파의 자기반성과 비대 위의 혁신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정리하였다. 전체적으로 문제의식을 공감하는 부분과 잘못된 관점에 대한 지적으로 이루어졌다. 비대 위 혁신안에 대한 비판은 관점자체의 심각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목조목 따지는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았다.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친북 편향, 일심 회 건”으로 비판을 한정짓고 그 외 일부 문제요소만 지적하는 것으로 국한하였음을 밝힌다.

둘째, 대선 평가를 시도하였다. 사실 대선평가는 훨씬 많은 자료와 근거를 두고 다양하고 진지한 토론을 전개하면서 그 성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는 다음 기회로 돌리고 우선 혁신안에서 제출된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나의 의견과 비판을 전개하였다.

셋째, 나름대로 비대 위 혁신안과 별개의 당의 진단과 혁신안을 제출하였다. 물론 이것은 안건으로 제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 대회에서 다루어지지 않을지만 많은 동지들과 깊이 있는 성찰과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지적을 당부한다.

이 토론회를 계기로 불필요한 감정싸움을 중단하고 당의 진로를 둘러싼 건설적인 고민이

보다 진지하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본다.

비대위의 제2창당을 위한 평가와 혁신안에 대한 입장

- 김 창 현(민주노동당 전 사무총장)

1. 민주노동당의 쇄신은 사활적 과제이다.

○ 민주노동당이 국민 대중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는 대안정당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당 운동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쇄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한다.

민주노동당이 낡은 보수정치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민중의 여망에 힘입어 빠른 성장을 이루었고, 지난 총선에서는 10석의 의석을 확보하는 약진을 이루었으나 그 후 민중의 높아진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 원인은 객관적 환경이 아니라 주체에 있다. △ 새로운 사회의 비전 제시 △ 정당다운 대안의 제시와 참신한 정치활동 △ 당원과 대중주체의 정치활동 △ 다양한 가치를 포용하는 폭넓은 대중정당 △ 정파적 대립의 극복과 당대열의 단결 등 진보정당, 대안정당으로서 갖추어야 할 면모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

지난 대선의 패배는 바로 이와 같은 우리 당의 약점과 여기에서 비롯된 대중의 부정적 인식이 반영된 것이 사실이라는 점에서 지금 당의 쇄신은 사활적 과제이다.

○ ‘자주파’는 당내 최대정파이자 지난 4년간 당의 지도권을 사실상 행사한 정파로서 시대의 요구, 민중의 기대에 맞게 민주노동당을 끊임없이 혁신 발전시키지 못한 점, 당대열의 단결 단결을 이루지 못한 점, 그 결과 대선에서 패배한 점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통감하며, 뼈를 깎는 성찰과 혁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전인미답의 진보정당운동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정확히 통찰하여 당 발전의 자양분으로 삼고 이를 통해 새로운 사회의 비전을 제시하고 반대를 넘어 대안의 제시를 통해 대안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야 했으나 이점에서 당내 자주파는 당의 집권 세력으로서 소명을 다하지 못하였다.

또 진보정치의 전형을 만들기 위한 치열한 노력, 사활적 노력을 전개해야 했으나 기존의 낡은 방식을 관성적으로 답습하거나 새로운 전형을 창조하지 못함으로써 진보정당다운 진취성, 참신함을 보여주지 못했으며, 민심을 얻는 ‘감동의 정치’를 구현하지 못하였다. 특히 원내 활동과 대중운동을 결합하는 ‘거대한 소수’ 전략을 정확히 구현하지 못하여 소수정당으로서의 한계에 봉착하였고, 원내 활동의 성과를 의원 개인이 아닌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로 이끌어 내지도 못하였다.

아울러 민주노동당의 힘은 ‘진성 당원 제’에 있고 당원주체의 정치활동, 대중주체의 정치활동에 진보정당의 힘의 원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파는 당의 지도권을 갖고 있었던 지난 4년 동안 분회건설을 위한 활동 등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진전된 성과를 내오지 못하였다. 이른바 ‘생활정치’, ‘대중주체의 정치’를 구현하지 못한 것이다.

또 자주와 평등을 기치로 서민생활, 생태, 소수자, 여성, 지식인, 평화, 인권 등 우리사회의 다양한 가치에 열려 있는 정당, 노동자 민중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진보적 민중이 참여하는 대중정당을 표방하고 실천하였으나 여전히 폐쇄적인 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충분히 극복하지 못하였다.

특히 ‘자주파’에 대해 패권적이라는 비판을 아프게 받아들이며 겸허한 자세로 뼈아픈 성찰과 혁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자주파’는 폭넓은 단결과 연대를 기본노선, 생명선으로 하며, 이 단결과 연대는 일시적이거나 부분적이 것이 아니라 진보운동의 승리의 그날까지 동반자로 운명을 함께하는 전략적 단결, 전략적 연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안팎에서 자주파에 대해 패권적이라는 비판을 가하는 것은 자주파에게 민중의 이익, 당의 이익보다는 정파의 이익을 앞세우는 태도가 있다는 것, 존중하고 배려하는 포용력, 권리나 이득을 기꺼이 양보하고 헌신하려는 자세가 부족하며, 자기의 주장을 무리하게 관철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점에 대해 누가 무어라고 하기 전에 민중에 복무하고 운동에 헌신하는 운동가, 정치세력으로서 자기 운동성에 기반 한 성찰과 혁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 비대위의 <제2창당을 위한 평가와 혁신안>에 대한 총평

비대위의 혁신안은 17대 대선평가, 당내 쟁점사안에 대한 재평가, 3. 제2창당 추진방안 및 방향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는 대선을 통해 당의 문제점을 찾고, 당의 위기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당의 혁신방향을 밝히고자 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비대위의 혁신안은 다음 몇 가지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

○ 첫째, 당의 위기진단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이지 못하다.

병을 고치려면 진단이 정확해야 한다. 진단이 잘못되면 멀쩡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비대위의 평가서는 시종일관 민주노동당이 오늘과 같은 어려움에 처한 것은 당내 이른바 자주파의 패권 때문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에 정파갈등과 대립으로 인한 폐해가 있었으며, 이것이 당의 발전을 가로막아온 것이 사실이다. 자주계열도 여기에 책임이 있으며 다수파로서 당권을 책임져왔으므로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민주노동당의 위기를 자주계열의 패권 탓으로 돌리는 것은 과학적이지 못하다. 비전과 활동방식 등 보다 근본적인 지점에서 민심을 얻지 못한 원인을 성찰하지 않고 누구 탓이라고 말하는 방식으로는 올바른 혁신이 이루어지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정파대결의 연장선에 있는 정치공세가 될 수도 있다.

다수파가 하면 패권이고 민주주의를 왜곡한 행위이며 소수파가 한 것은 평당원의 뜻이며 민주주의라는 도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 당이 확대 발전해온 그간의 성과를 다 무시하고 실패만을 거둬온 것으로 평가하는 것도 인정하기 어렵다.

진정한 당의 단합은 정파에 대한 공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지한 자기 성찰, 당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공동의 모색과 실천, 그 속에서 회복되는 신뢰에 있다고 할 때 비대위의 혁신안이 지나치게 자주파에 대한 공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공격이 역울한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는 혁신과 단결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 둘째, 비대의의 혁신안은 ‘분당론자’들의 정치공세를 무분별하게 수용하였다.

자주파에게 대선패배의 큰 책임이 있고 민주노동당의 혁신이 절박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당을 하자는 주장, 민주노동당을 부정하고 새로운 진보정당운동을 하자는 주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분열행위이다.

특히 이들이 만들어낸 이른바 ‘중 북논쟁’은 건전한 정책이나 노선을 두고 벌이는 논쟁이 아니다. 상대를 매장하고, 자신의 분열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비이성적인 마녀사냥 식 색깔론이다. 민주노동당이 진지한 쇄신을 모색해야 할 중대한 시기에 소모적인 논쟁을 조장하여 대중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있다고 걱정하고 개탄하는 목소리가 당 안팎에 가득하다.

그런데도 당을 수습해야 할 책임이 있는 비대 위가 이러한 분열행위에 대해 단호히 선을 긋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 북주의 척결’ 논리가 그대로 배어있는 <편향적 친북행위 관련>안건을 대의원대회안건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이 안건의 통과여부를 비대위에 대한 신임으로 간주하겠다고 하고 있다.

분열주의자들이 분당을 협박한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고 자주파에게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한대서야 도대체 진보정당이 지켜야 할 원칙은 무엇인가? 분당으로 협박하면 무엇이든 수용해야 하고 그 것을 수용하지 않고 부결시키면 당의 분열의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분열주의에 대해 어떤 규율을 세울 수 있는가? 그 것이 기성 정치꾼들이 일삼는 '협박정치'와 무엇이 다른가?

어려울 때일수록 중심을 지켜야 한다. 어떻게든 분당을 막아보자는 충정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당원의 입장, 운동의 원칙에 기초해서 공명정대한 혁신안을 마련할 때만 당의 단합도 혁신도 이루어질 수 있다. '분열주의자들을 달래기 위한 혁신안'이 아니라 '당원의 요구에 부응하는 혁신안'이 되어야 한다.

○ 셋째, 충분한 논의와 연구, 당원 의견수렴이 결여된 채 성급하고 졸속으로 만들어졌다.

비대 위가 마음이 급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총선을 앞두고 당의 일신한 쇄신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부담에 비해 시간이 촉박하고 당내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점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제 2 창당 안'을 비롯한 혁신안은 당의 진로와 관련된 중대하고 근본적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충분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또 이 문제들은 당과 진보진영 안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혁신의 주체도 당원이고 그 동력도 당원에게 있다는 점에서 당원들의 공감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은 혁신안의 성패를 좌우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비대 위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 주장을 당의 공식안건으로 대의원대회에 제출하였다.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당의 지도부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하기 어렵다.

협의를 의견수렴 없이 올린 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신임으로 간주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이 또 다른 방식의 패권이요 민주주의 파괴가 아니라고 어찌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마지못해 동의를 한들 그 안이 힘을 얻을 수 있겠는가?

○ 정파적 공격,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당을 책임지는 동반자적 입장에서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힘과 지혜를 모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자주파는 '대선패배'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퇴하고 뼈아픈 성찰과 혁신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비대위에 전권을 부여하고 사심 없이 당의 단합과 혁신을 위해 돕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그러나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면서 '진정한 혁신'은 실종될 위기에 처했다. '종 북논쟁'같은 소모적이고 악의적인 정치공세가 횡횡하는 상황에서 그 어떤 진지한 성찰이 가능하겠는가?

비대 위가 ‘분당론자’들의 주장을 무분별하게 수용하면서 당내에서 신뢰에 기초해서 당의 혁신과 발전을 도모하는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은 불가능해졌다. 그 결과 ‘당원이 바라는 혁신안’이 아니라 ‘분당론자들을 달래기 위한 혁신안’이 나왔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토록 신뢰가 무너졌는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천박한 정치공세가 아닌 당의 미래와 노선을 놓고 진정한 논쟁을 하자. 무엇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자. 정파를 뛰어넘어 당원이 바라는 진정한 혁신안을 만들자. 그 길만이 살길이다.

3. 각 내용에 대한 의견

1) (소위)일심회사건 관련

○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 사건이다.

비대 위는 국가보안법 뒤에 숨지 말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이 당헌 당규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안은 국가보안법과 떼어내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없다. 한국사회에서 진보운동은 근원적으로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것이며 끊임없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탄압받게 되어 있다. 죽산 조봉암이 국가보안법의 희생자가 되었듯이 수 십 년동안 진보정당이 자리 잡지 못한 근본원인도 국가보안법체제가 있기 때문이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과 태도가 진보운동의 원칙중의 원칙으로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국가보안법의 적용자체를 반대하고 폐지를 주장하는 것, 그 피해자를 도와주고 지지하는 것은 그 내용에 대한 입장을 떠나 진보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의 의무이다.

따라서 진보정당이 국가보안법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을 처벌하자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이를 대의원대회에서 출당조치하자라는 것은 진보적 원칙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일이다.

○ 최 기영 이정훈을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 왜곡에 기초하고 있다.

비대 위는 <최 기영, 이정훈이 북한 및 북한과 연계된 인물에게 전달할 것을 목적으로 당내 동향과 당직자의 신상과 성향을 분석한 자료를 유출했다>고 적시하고 있는데 이 근거는 공

안기관의 공소장 외에는 없다. 당사자들은 일관하게 부인하고 있다. 법원에서도 많은 부분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아 당사자의 주장이 사실임을 인정하였다.

○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당헌당규 위반으로 출당 조치해야 한다면 대의원대회에서 출당대상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

당헌당규 위반에 관한 사안이라면 당헌 당규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처리될 수는 있을 지라도 대의원대회에서 출당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최 기영 이정훈이 당헌당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했는지,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지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진상조사와 당사자의 소명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비대 위는 공안기관의 공소와 국가보안법에 의거한 법원의 판결만을 가지고 징계를 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당원의 권리를 무시하는 부당한 처사이다.

이것이 사리에 맞음에도 한사코 대의원대회에서 출당처분을 하지는 것은 마치 이 문제 때문에 민주노동당이 ‘친북정당’이란 이미지가 누적되고 그 것이 자주파의 친북적 성향 때문이라는 정치공세를 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 반 북적 입장에서 보면 북을 통일의 동반자로 대하는 것이 ‘친북’으로 보인다.

비대 위는 당이 소위 일심회사건과 관련한 조치와 진상규명을 취하지 않아 친북적 이미지가 누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당은 <6.15이후 최대의 간첩단사건>이라고 주장하며 당에 흠집을 내려는 공안기관과 수구언론에 대한 투쟁을 제대로 벌이지 않았다. 조선일보가 거의 열흘 가까이 전 지면을 활용하여 민주노동당을 간첩 당으로 공격할 때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소위 일심 회 사건으로 당이 피해를 보게 된 또 하나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만약 그때 투쟁을 힘 있게 벌였다면 법원이 간첩단사건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릴 수 밖에 없었을 때 당은 주동에 설 수 있었다. 그러나 당의 일각에서는 시종일관 국가 보안법 앞에 위축되어 소심한 자세를 취하였다.

이것은 반복 대결의식, 분단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친북을 부정적 용어로 사용하고 친북 이미지 때문에 대중적으로 손해 본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서 드러나고 있다.

원래 단어 그 자체의 의미로 본다면 ‘친북’은 같은 민족끼리 친하게 지내자는 뜻으로 좋은 의미이다. 그러나 우리가 ‘친일파’를 호칭할 때 일본과 외교 선린, 즉 일본과 친하게 지내자는 의미보다 우리나라 민중의 이익이 아닌 일본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각인되듯 ‘친북’은 북을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부정적 뜻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 당에 어느 누구도 부정적 의미의 친북하자는 사람은 없다. 우리 당은 ‘친북당’이 아니라 ‘평화 통일 당’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친북’ 또는 ‘중 북’을 비판하

는 사람들은 민족적 입장에 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반 북적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이다. 북의 ‘인권문제’, ‘남북자 문제’ 등을 걸어 북을 비판해야 한다는 주장이 바로 그 것이다. 화해와 평화, 통일은 체제비방을 중단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상식이다. 사실 북의 ‘인권문제’, ‘남북자문제’ 등은 김대중, 노무현정부조차도 노골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던 문제이다. 북을 붕괴시킬 목적을 가진 미국과 친미수구세력이 빼어든 칼이다.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이들 제국주의자들의 편에 서란 말인가? 시대착오적 반북은 한나라당도 내놓고 못하는 것이며 이는 아무런 미래도 없는 이회창의 자유 선진 당이나 하는 것이다.

비대 위의 반북의식이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것은 <당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훼손시키려한 북한당국에 엄중 항의하며 이후 북한 당국은 남한의 진보정당운동에 대한 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 한다>는 것을 대의원 대회안건으로 만든 것에서 분명해진다. 설령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이런 방식은 정당이 하기에 전혀 적절하지 않는 유치한 일이다. 일심회 관련 당사자도 부인하고 북한 당국도 이를 인정할 적인 없는 사안을 두고 대내외적으로 선포하는 것이야말로 책임 있는 공당이 할 수 없는 저속한 행위인 것이다.

2) 북 핵 자위론 등

○ 당의 공식입장은 북의 핵실험에 유감을 표명한 것이었다.

“많은 국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것에 대하여 민주노동당은 강한 충격과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핵의 자위적 수단을 포함한 핵무기정책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힌다.” (2006년 10.9 북 핵 실험 당시 최고위원회)

○ 특정 개인의 발언을 당 대회에서 당 강령정신을 벗어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북 핵관련 발언은 한 당직자의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있는 일이다. 각급 토론이나 인터뷰과정에서 당원들은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할 권리가 있다. 이를 당 강령을 가지고 규정하려고 한다면 수없이 많은 발언들이 당 강령 위반으로 걸려들 것이다. 토론을 통해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를 강령을 가지고 재단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

뿐만 아니라 정책위원장의 북 핵 자위론이라는 당시의 발언에 대한 당내 일각의 주장은 왜곡 과장되어있다. 이른바 북 핵 자위론이라는 발언이 북의 입장에 대한 설명인지, 정세에 대한 견해인지 발언의 전후관계를 밝히지 않고 북 핵 자위론으로 북 핵을 옹호했다는 것이며 나아가 이러한 견해가 마치 핵무기를 찬성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다. 당시 일부에서는 이 발언을 문제 삼기 위해 강령에 없는 비핵화 당 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당의 정책과 노선을 바로 세우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장을 일방적으로 관철하려는 데 불과하다.

○ 비대위 안은 한반도 비핵지대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

비대 위는 <2.10 북핵 보유선언이 △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반전반핵의 당 강령과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추구하는 당 정책에 입각해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요지의 결의안 채택이 부결(2005년 2월)>된 것을 문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안건은 초보적인 지식도 갖추지 못한 것이었기에 부결되었다. 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한반도에 배치된 미국의 핵무기 폐기를 위해 체결되었으나 이 후 미국이 먼저 위반해 버림으로 사실상 사문화되어 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덮고 북에게만 일방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당시 부결의 원인이었다. 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미국의 전술핵무기는 철수했다고는 하나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은 오히려 점증적으로 강화되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핵위협을 포함한 전쟁위협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북의 요구를 무시하고 강압으로 붕괴시키려는 미국에 맞서 핵무기 보유선언을 한 북에 대해 비난할 경우 미국의 강압정책을 동조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북의 핵보유선언에 대해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핵개발에 찬성한다거나 핵무기 자체를 찬성하는 것으로 왜곡하는 것은 잘 모르고 하는 말이거나 아니면 의도적인 정치공세이다.

한반도에서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 제조, 실험, 반입, 통과, 사용, 훈련, 핵무기를 통한 위협과 제공(핵우산) 등에 반대한다는 ‘한반도비핵지대화’가 민주노동당의 당론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북에게만이 아니라 미국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미국의 핵위협이 실재하는 현실에서 북의 핵무기보유를 일방적으로 비난할 수 없다는 주장, 더욱이 안전을 보장하면 핵을 포기하겠다고 공언하는 북을 무시하는 미국을 두고 북의 핵무기 보유가 공격용이 아니라 자위용이라는 주장을 북의 핵개발을 찬성하거나 나아가 핵무기를 찬성하는 입장으로 몰아가는 것은 지나치게 단선적인 논리이며, 무리한 정치공세이다.

○ <대선정책공약 중 ‘미군철수 완료시점에 북 핵무기 폐기 완료’는 당론으로 정해진 바 없음을 확인 한다>는 주장은 비대 위의 무지를 드러낸 것이다. 지금 진행 중인 6자회담과 2.13 합의, 10.3합의 내용을 보면 이미 존재하고 있는 북의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의 폐기와 평화협정은 동시행동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은 미군 철수 없는 평화협정을 단호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핵무기 폐기완료와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조금만 공부해도 알 수 있는 상식적인 일인 것이다.

3. 패권주의의 민주주의 왜곡의 건

비대 위는 여러 사례들을 들면서 <각급 당부의 당권 장악을 위한 일부 정파의 패권주의적 행태로부터 파생한 사건들이거나 당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거나 혹은 이와 관련하여 논란 중인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비대위는 그동안 당내에 논란으로 되었던 사건 중 자주계열이 관련되었다고 간주하는 일부사례만을 거론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이 사례들 중 대부분이 <2006년 지방선거 관련 광주시 당 회계부정 사건>, <울산 활동가 57명이 울산시 당 사무국장을 당기위원회에 제소한 사건(2007)> 등과 같이 정파갈등과 대립과정에 다른 정파에 의해 촉발된 사건이다. <2002년 대선시기, 노무현 지지사건>은 특정 정파의 문제라고 할 수 없다. <2003년 의정부 갑 지구당 창당 관련사건>은 당 절차상의 문제였지 패권주의나 민주주의 훼손과 관련이 없다. <복합기 사건(?)이나 기관지 파동(?)>등이 대체 패권주의나 민주주의 훼손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비대 위는 그 책임이 특정 정파에게만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는 당 지도부로서 공정하지 못한 자세이다.

또한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에 대한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확인 한다>고 하여 진보정당으로서 존엄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안전을 제출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언제부터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공안당국을 빌어 당의 질서를 확립하려고 했는지 해피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당내에 정파 간 고질적인 갈등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당의 발전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 책임이 다수파인 자주파에게 가장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모두에서 밝혔시피 자주파에게 당의 이익보다는 정파의 이익을 앞세우는 경향, 다수의 힘으로 자기 의사를 관철하는 패권적 경향이 있었던 것을 인정하고 뼈를 깎는 성찰과 혁신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이점에 대해서는 그 어떤 비판도 달게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어떤 기득권에도 연연하지 않고 오직 당과 진보운동의 이익을 위해 철저히 복무하는 자세로 거듭날 것이다.

그러나 당내 정파 간 갈등을 해소하고 단합을 이루는 방법이 특정정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매도하는 방식으로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당의 쇄신과 단합을 위한 진지한 모색은 사라지고 오직 정치공세만 횡횡하는 지금의 풍토에서 과연 새로운 신뢰와 단합의 기운이 싹틀 수 있는가? 당을 둘로 쪼개려는 용납할 수 없는 분열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은 채 자주파만 공격하면 당의 단합은 이루어지는가?

4. 제 2 창당 안

당의 쇄신은 필요하다. ‘제2의 창당’이라는 정신으로 근본으로 돌아가 쇄신하자는 정신에는 조금의 이견도 없다. 지금 겪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아픔을 딛고 다시 국민들에게 지지와 사랑을 받기 위한 거듭남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제2창당이라고 이름 붙이려면 그에 맞는 전반방향과 체계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비대 위의 제 2 창당 안은 이름만 거창할 뿐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가득 차 있다. 실행계획은 그 높낮이가 구분되지 않는 채 발상이나 실무적 구상에 그치고 있다.

제 2 창당 안에 있는 내용 중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시행해야 하지만 제 2창당이라는 구상으로 펼치려면 내실 있는 내용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제2의 창당’이 청산주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당내 충분한 논의와 연구를 바탕으로 계승 발전시킬 것은 무엇이며 혁파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또 비전과 전망은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한다. 특히 그 과정이 철저하게 당원들의 참여와 공감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당원이 함께 실천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비대위의 ‘제 2 창당 안’은 무언가 그럴 듯한 쇄신안을 내놓아야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지극히 선언적이며 졸속적인 것으로 보인다.

정파등록제도 그렇다. 이 문제는 이전부터 그 장단점을 놓고 말이 많았던 문제이다. 연구도 덜되어 있다. 그러면 이참에 정파문제를 해결할 제도적 장치를 집중 연구해야 할 일이지 연구도 검증도 되지 않은 안을 내놓고 보자는 식이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은가?

우리 당의 쇄신이 아주 근본적이고 구조적이라면 이렇게 졸속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라 좀 더 과학적인 연구와 당내 민주적인 토론이 더 깊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민주노동당 17대 대선 평가

- 김 창 현(민주노동당 전 사무총장)

비대위 평가서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첨부하여

대선 결과의 의미

17대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이 3%, 71만2,121표 득표로 설정한 목표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민주노동당의 17대 대선결과는 <집권가능한 대안정당의 위상을 확보하고 18대 총선 승리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비판 : <당지지율이 1997년 국민승리 21에서 시작하여 2004년 4.15총선까지 승승장구했다>는 평가는 사실과 다르다. 민주노동당이 발전 강화한 경로를 걸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 쓰러린 패배와 우여곡절도 있었다.

2000년 총선에서 갈망하던 원내 진입에 실패한 것, 2002년 대선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득표에 머무른 것이 그것이다. 당의 어려움이 2004년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주장을 펼치고 17대 대선 패배를 과도하게 규정짓기 위한 왜곡이다.

이런 왜곡된 사실에 근거해서 <2004년 이후 4년은 당의 연속적 실패의 과정>이라고 주장하는데 지난 4년간 당이 확대 발전된 측면과 성과를 인정하지 않는 일면적이고 과도한 주장이다.

비대위의 평가에서 득표결과만을 가지고 대선결과는 참패라고 규정한 것은 정당의 평가로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단순히 득표수만으로는 선거의 결과를 평가할 수 없는 것이 현재 민주노동당의 발전단계와 정치적 위상이다.

특히 대선은 더욱 그렇다. 결과에 담긴 의의에 대한 정치적 분석과 전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비대위의 평가는 득표수를 가지고 참패라고 규정짓고 그 규정에 근거하여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앞뒤가 바뀐 것으로서 정치적 주장으로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의 공식적 평가로는 적절하지 못하다.

17대 대선 결과에 담겨 있는 의미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로 2005년 보궐선거 패배로 드러나기 시작한 당의 정치적 위상과 지지도 하락이 심화된 것이다. 17대 대선에서 획득한 표는 16대 대선에서 획득한 3.9%, 95만7,148표에 미치지 못하였다. 대선이 담고 있는 의미는 획득한 표의 감소에 있는 것이 아니다. 민주노동당

이 16대 대선에서 가졌던 영향력보다 훨씬 미약한데 있다.

둘째로 민주노동당을 대안의 정치세력, 미래의 희망을 가진 정당으로 생각하고 기대를 걸었던 대중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대선의 저조한 지지를 낳은 주된 요인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반대의사가 높아진 때문이 아니라 지지의사가 소극화돼 있다. 당지지층의 투표율(74.7%)이 다른 정당의 지지층 투표율(86-84.4%)보다 낮았다는 것, 지난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했던 유권자의 상당부분이 투표를 하지 않은 것이 이를 증명한다.

비판 : 대선결과가 <안이하게 대처해온 결과>라는 모호하고 추상적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객관성이 없는 것이다.

<당원의 결속 및 국민 대중의 지지는 당의 양적 성장과 별개로 당 노선과 실천이 핵심문제를 확인>했다는 것은 지지율하락이 어떤 노선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 것인지 근거가 없는 주장인 것이다.

당 지지층 중 일부(23.%)만 이 권 영길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대선과 각종선거에서 후보투표에서 일정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며 이는 민주노동당의 현재 정치적 위상이 주로 작용한 것이다.

5년 전 민주노동당을 지지했던 유권자중 일부(25.6%중 일부)가 다른 정당을 투표한 것은 한나라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며 이는 노무현 심판이 가장 강력한 의사로 표출되었기 때문이다.

이 지표들에 대한 심층적 분석 없이 이를 민주노동당에 대한 부정과 반대의 근거로 삼는 것은 객관성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지표를 가지고 <당 핵심 지지층의 충성도 약화와 잠재적 지지층의 이탈 현상이 확인>되었다고 하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며 사실과도 다르다. 일선선거운동과 여론조사사상의 상세지표에서는 핵심지지층의 충성도가 강화된 측면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비대 위 평가서가 <핵심지지층>에 대한 개념적 혼란도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잠재적 지지층의 이탈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잠재적 지지층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호하지만 당지지층을 말하는 것이라면 당지지층의 대부분은 지지에서 이탈한 것이 아니라 투표에서 이탈한 것이다. 이를 지지이탈로 보는 것은 과도한 것임이 분명하다.

<이는 당 활동과 대선 전략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반영>한다고 하였는데 이번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을 지지의사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요인이 된 것이 당 활동과 대선 전략이 아니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주관적 주장에 불과하다. <당 활동과 대선 전략이 대중의 요구와 정서에 맞지 않았다>는 평가와 <대중이 당 활동과 대선 전략에 대한 불만과 불신 때문에 지지에서 이탈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기 때문이다.

<결국 2004년 이후 지속적인 당 지지율의 하락과 대선의 참패는 민주노동당의 기존 활동

이 더 이상 국민 대중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이라는 주장은 당 활동 전반에 대한 패배이며 이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허무주의를 조장하는 무책임한 주장인 것이다. 도리어 원내진출에 맞는 활동을 펼치지 못했고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는 평가가 올바른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결과 속에서도 성과는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과 전농회원들을 비롯한 진보진영에 망라된 대중들 속에서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는 강화되었다. 대중조직 회원들이 민주노동당에 대한 태도가 기대와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자신의 당으로 받아들이고 정치적 견지에서 지지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발전하였다.

지역의 핵심연고자 지지자들과 민주노동당의 관계도 강화되었다. 지역 당 조직들은 지지자들을 더욱 세밀하게 파악하게 되었으며 지지자들이 당의 선거운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민주노총과 전농을 비롯한 진보진영은 대선투쟁에 헌신적으로 나섰으며 당과의 조직적 결합이 강화되었다.

일부 지역에서만 펼쳐졌던 조직 득표 전략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이는 향후 당 사업 전반의 좋은 경험으로 축적되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현상과 성과가 있지만 이번 대선으로 민주노동당이 심각한 난관에 직면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대선결과는 대선의 특성으로 인해 일회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일정한 흐름을 가지고 심화되어온 것이다. 대선결과는 지난 몇 개월간의 대선운동에 대한 평가만이 아니라 원내진출이후 4년간의 민주노동당의 정치활동, 의정활동에 대한 대중적 평가이기도 하다.

대선결과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대중의 준열한 비판이 표현된 것이다. 17대 대선은 민주노동당에게 진보정당으로서 입지가 위태로워지고 있으며 그 일각이 붕괴되고 있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 민주노동당에 대한 대중의 지지와 태도의 변화는 눈앞에 닥친 18대 총선에서 더 심각한 형태로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선 후 당내에서 정파 간 갈등을 인위적으로 조장하는 일이 벌어졌으며 패배감과 허무감에 쌓인 일부사람들이 민주노동당을 파괴하는 분열책동을 벌이고 있다. 이로 인하여 민주노동당에는 실제적인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

비판 : 비대위의 대선 평가서의 <대선결과의 의미>부분은 정당의 대선평가서로서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진보정당의 평가서로서 심각한 결함이 있는데 그것은 결과와 지표에 기초하되 내포하고 있는 정치적 의미를 깊이 있게 파악하려는 노력이 부족함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선거를 단순한 투표행위로 보지 않고 대중의 의사와 요구가 사회정치적 환경과 운동의 역동성과 결부하여 표출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수치와 지표에 대한 해석에 불일치가 있고 그와 연관성 없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 것이다.

결과를 낳은 요인

객관적 요인

17대 대선은 민주노동당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에서 전개되었다.

노무현 정권 심판의사가 다른 모든 사안을 압도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주장이나 진보적 대안이 대중의 관심을 받기 힘들었다.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대한 BBK등 정치공세가 선거전의 관심사가 되어 민주노동당의 정책적 장점을 활용하는데 크게 제약받았다.

문 국현, 이 회창의 출마 등으로 다자구도가 형성되어 제3의 후보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선거형세에 미치는 영향이 위축되었다.

비판 : <노무현 심판 론에 의해 여당과 동반몰락>했으며 <이는 지난 4년 동안 차별화에 성공하지 못하여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는 평가는 사실을 호도한 것이다.

이전 선거에서 노무현을 지지했던 유권자의 투표성향과 민주노동당 지지층의 투표양상이 같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하락양상이 같다는 것만으로 동반몰락이라고 규정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당 지지층 중 권 영길 후보를 찍지 않는 다수가 이명박을 지지하였다. 따라서 근원적인 원인은 (신)자유주의 개혁세력과 차별화에 성공하지 못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보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의 본질적 계급적 차이를 유권자에게 인식시키지 못한 데 있는 것이다.

그간 당내 일부에서는 노무현을 공격해야 그 표가 떨어져 나와 민주노동당의 지지가 상승된다는 논리에 매달려 있었는데 이번 대선정세와 선거결과는 오히려 그런 주장이 현실에

서 허황된 것임을 증명한 것이다.

다자구도는 민주노동당에게 불리하다. 다자구도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대결구도가 만들어 지지 않고 기성정치권의 세력대결장으로 되어, 정책이 부각되지 않은 채 인물위주의 선거로 흘러가게 된다. 따라서 <후보난립>이 민주노동당에 유리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허황된 것이다.

따라서 <선거구도는 결코 불리한 것만이 아니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는 3자구도에서는 권 영길 후보의 지지도가 10%에 도달하였는데 다자구도에서는 3%선에 머문 여론조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불리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대한민국의 유일 진보정당을 자임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대중적 평가와 인식을 완전히 무시하는 주관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다른 후보들이 <아무도 한미FTA, 비정규직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모든 후보들이 앞 다투어 비정규직에 대해 이야기 하였으며 민주노동당도 비정규직에 대해 이야기했으나 대중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명박의 압도적 지지도는 투표일 전에 당선이 확정되다시피 하였으므로 이미 사표현상을 다 발생시켰다고 볼 수 있다. 즉 지지층의 상당부분이 투표를 하지 않았다. 이는 막판에 다른 후보 지지로 넘어가는 것과 또 다른 사표효과이며 이는 막판 사표심리보다 적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사표심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번 선거>가 <차별화된 진보로 입지를 구축했다면> <제1야당으로 성장하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될 수 있었다는 주장은 현실에 기초하지 않는 관념이 낳은 몽상에 불과하다. 이번 선거는 민주노동당이 <차별화된 진보로 입지>를 구축하기에 제약이 매우 많은 선거였음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차별화하지 못하는데 원인이 찾아야 것이 아니라 차별화하기위한 노력이 어떻게 실현되지 못했는가를 평가함이 타당하다.

<천재일우의 기회>는 일부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것일 뿐이다. 대중들은 민주노동당에게 천재일우의 기회를 줄 의사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어디에도 없다.

선거결과는 객관적 한계로 인해 초래된 측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에서 대선 패배는 외적 요인 탓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당의 주체적 요인에 기인한 실패>라는 주장은 객관적 어려움과 현실적 한계를 타개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거나 잘못되었으며 따라서 주체에 결과의 책임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로 되어야지 <외적요인은 관참았는데 주체적 요인 때문에 패했다는 논리를 펴는 것은 과학적인 분석

이 아니며 주장을 위한 주장에 불과한 것이다.

<경기회복 경제 활성화>를 차기 대통령이 최우선과제로 꼽고 대선의 주요 관심사로 된 것은 사안자체에 결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번 대선을 대하는 대중의 정치적 의사로부터 오는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경제능력 때문에 이명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명박이 압도적 지지를 받기 때문에 경제 문제가 1순위로 오른 것이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의제가 아니라 대선의 계급적 성격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정운영 경험과 능력이 부족해서 민주노동당에 투표하지 않았다>는 것을 <민주노동당을 무능한 정당으로 판정하여 외면했다>는 주장으로 전개하는 것은 왜곡 확장에 불과한 평가인 것이다.

주관적 요인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과 변화를 요구하는 대중의 마음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그에 맞는 선거운동을 전개하지 못하였다.

16대 대선과 17대 총선의 여중생투쟁이나 탄핵반대운동과 같은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승리를 가져온 대중투쟁을 전개하지 못하였다.

모든 당원들과 진보진영의 전체 역량이 합심 단결하여 선거운동을 전개하지 못하였다.

주체적 평가

대선에서 대중들의 외면을 받은 기본적인 요인은 민주노동당이 진보정당으로서 새로운 사회의 상을 제시하고 시대변화를 주도하는 진취성을 발휘하지 못한 것, 끊임없이 자기를 혁신하고 발전하는 참신함을 보여주지 못한데 있다.

이는 대중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중심에 놓고 생각하고 행동하기보다 자기주장과 논리를 앞세운 때문이다. 진보정당이 정당하다는 명제에만 빠져 대중들이 민주노동당을 대하는 태도와 입장이 어떠한지를 대수롭지 않는 것으로 여긴 때문이다.

이것은 보수-개혁의 양자대결구도가 재현될 것이며 이것을 보수-개혁-진보의 3자대결로 만들고 사표현상을 극복하면 10%에 이르는 당지지층의 상당부분을 득표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안이한 자세를 낳았다.

대중의 심정이 어떠한지, 지향과 요구가 무엇인지를 예리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 대중이 민주노동당을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요구하는 지를 중심에 놓고 대선을 대하지 않은 것이 대선결과를 초래한 주체적 원인이다.

세부 사항에 대한 평가

계급투표전략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 의욕적으로 8010운동을 전개하였다. 지역에서 진보나무심기운동으로 돌파구를 열기도 하였다.

그러나 계급투표전략은 목표에 이르지 못하였다. 여전히 민주노총 조합원 중 상당수는 여전히 민주노동당에 투표하지 않았으며 가족과 연고자로 확장하는 활동의 성과는 미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급투표를 조직하는 활동을 펼친 사업장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정치의식은 높아졌으며 민주노동당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었다.

계급투표가 80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여전히 후보에 대한 선호와 지지에 머무르고 노동계급의 요구와 정치적 주장을 실현하는 것으로 되지 못한 때문이다. 10으로 나아가지 못한 이유는 노동자들이 열성적인 민주노동당의 선거운동원으로 나서기에는 당의 사업이 부족한 때문이다.

비판 : <계급투표는 실현되지 못했다>고 하였는데 계급투표는 민주노동당이 어떤 대상을 기본계급이라고 규정한다고 민주노동당에게 투표하는 것이 아니다. 계급적으로 각성하고 조직되어야 계급투표가 실현되는 것이다.

따라서 조직된 노동자들 속에서 지난 선거에 비한 지지도의 변화를 근거로 계급투표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함이 타당하다.

<비정규직도 평균 투표율 80.7%보다 낮은 71.5%만이 투표했고, 투표한 비정규직 가운데 3.4%만이 민주노동당에 투표했다>는 것을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로부터도 외면 받게 되었다>는 주장은 과도한 것이다.

이러한 투표양상은 새로 나타난 것이 아닌 것이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민주노동당은 도시 빈민으로부터는 오래 전부터 외면 받고 있었으며 노동자 농민으로부터도 외면 받은 지 오래된 정당이 되는것이다.

따라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로 평가해야함이 옳바르다.

선거슬로건

<세상을 바꾸는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은 이번 대선의 성격과 민주노동당의 전략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당내 정파 간 절충의 산물이었다. 게다가 이 슬로건의 이미지를 구체화하지 못하였다. 대선기획과 홍보전략, 미디어전략에서도 슬로건에서 나타난 절충 현상이 나타났다.

대중의 요구와 정서에 기초하지 않고 정파관계에 의해 만들어진 슬로건이 대중의 외면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는 선거 전략과 관련된 선거운동본부의 핵심부서가 일치성이 없고 능력과 무관하게 안배 위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코리아연방공화국 논란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국가 비전으로 내세워진 것이며 다른 정책이나 슬로건과 배치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를 인위적으로 민생문제와 대립시켰으며 선거에 들어서서도 이에 대한 관념적 논란을 그치지 않았다.

이런 사정으로 코리아연방공화국은 후보가 내건 주요 구호임에도 세부정책으로 채우지 못하고 대중적 슬로건으로 재정립 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과도하게 이를 내세우려는 시도로 갈등이 증폭되었다.

코리아연방공화국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비쳤다고 볼 수 없다. 정책은 실종된 이번 대선에서 대중은 민주노동당이 코리아연방공화국은 내세웠는지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코리아연방공화국을 이유로 당내 갈등을 밖으로 유포하고 공개적으로 선거운동을 해태한 행위가 당의 영상을 흐려 선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은 분명하다.

만인 보 백만 민중대회

만인 보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선거운동방식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준비성 있게 전반 선거운동계획에서 나오지 못하고 급히 조직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였다. 특히 당원들을 선거운동에 조직 동원해야 하는 시점에 후보가 만인 보 운동에 들어감으로써 대선에 당력을 동원하는데 어려움을 낳기도 했다.

백만 민중대회는 여러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고 시간적 여유도 적었으나 기층 계급의 요구를 전면화하고 대선투쟁의 조직력을 구축하는 데 실천적인 의미가 큰 것이었다.

그러나 백만 민중대회는 후보가 주창한 것임에도 당은 백만 민중대회를 자신이 책임지고 자신의 대회로 조직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대회가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대선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당의 단합

대선시기에 당일부에서는 선거운동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방관하는 현상이 있었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당 선거운동을 반대하고 장애를 조성하는 행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정파구도가 사고와 행동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되고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민주주의의식의 결여는 이번 대선에서 전당적 선거운동을 의식적으로 가로막았다.

대선이 당의 장래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선거였는데도 불구하고 정파의식에 갇혀 선거운동을 방관하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은 일은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

비판 :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일부 당원이 대선활동에 전력을 다하지 않거나 방관하는 일을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논리이다. 이것이 행위가 아닌 결과가 되려면 선거운동을 방관하게 된 정당한 이유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다른 의도가 없어야 한다. <경선 과정과 그동안 당 활동에서 고질화된 정파의 패권주의>때문이라고 하였는데 정파 간 갈등은 이전에도 있었으며 다른 정파의 후보가 나와도 선거운동을 열성적으로 하였던 전통을 당은 갖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특이한 현상에 대해서는 엄중한 파악이 필요하며 반드시 이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진성당원제 등 민주노동당의 진보적 제도를 잇는 새로운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지 못했다>것은 개방형 경선제가 무산된 것에 더 적합한 평가이며 <당내 민주주의와 투명성은 지속적으로 후퇴했다>는 것은 관련된 사실이 구체적 근거로 적시되지 않는 황당한 주장이다.

후보전술

17대 대선의 후보전술이 대선의 성격과 조성된 정치정세에 맞지 않았다는 것은 결과가 증명하는 것이다.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서도 부족점이 있었다는 점도 여러 사실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당원직선에 의해 선출된 후보이므로 후보자신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또한 다른 사람을 후보로 내세웠을 경우에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 근거가 없는 결과론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그리고 후보선출을 특정 정파의 비민주적 행위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서 나오는 정치선동이다.

문제가 있었다면 이번 대선에 대한 관점과 전략적 판단의 결함이 있었고 이것이 후보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이는 후보를 선택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다음 문제는 후보를 대선의 성격과 대중적 정서와 요구에 맞게 선거전에 내세우지 못한 것이다. 이로 하여 후보의 장점을 잘 드러나지 않고 약점이 더 부각되었다. 이는 선거전략 등 선거운동을 책임진 사람들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

교훈과 과제

대선 패배가 가슴 아프고 닥친 난관이 힘겨운 것이지만 진보정당승리의 길에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다. 힘을 합쳐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대중의 요구와 비판 앞에 철저히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 당의 쇄신과 대중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어려운 일을 먼저 맡아 나서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나 패배감에 젖어서도 안 되며 청산주의에 빠질 이유도 없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은 패배나 허무의 길이 아니라 진보진영, 민주노동당의 승리를 일궈내는 보람찬 투쟁의 길이다.

17대 대선은 군중노선에 의거하고 이를 철저히 구현하는 것이 승리의 길이며 여기에서 벗어나면 패배한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다.

대중에 철저히 의거하고 군중노선을 구현해야 한다. 당원들과 대중을 당의 주인 진보운동의 주력으로 내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군중노선에 입각하여 헌신하고 또 헌신해야 할 것이다.

비판 : <국민 대중들은 민주노동당을 ‘무능력한 아마추어 당’, ‘대안 없는 운동권 정당’ 이라고 평가>했다는 주장은 사실적 근거가 없다. 민주노동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유권자들, 특히 당지지층이 <무능력한 아마추어 당, 대안 없는 운동권 정당>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대선에서 지지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내진출이후 4년간의 평가가 부정적이라면 그 주된 평가 지점은 먼저 원내 활동의 부족

점, 원외활동과 원내 활동의 결합문제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당의 노동정치는 당 독자영역으로 진행된 내용이 없이 오로지 민주노총에게만 맡겨 놓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당의 노동정치는 당 독자영역으로 진행된 내용이 많이 있었고 도리어 민주노총에게만 맡겨놓은 적이 없었다. 독자적 노동정치의 계획과 실천은 부재했던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운동본부' '비정규센터' 등 명확한 사업으로 존재했다. 중앙당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위에서도 비정규직 사업과 실천을 다양하게 전개하였다. 당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비정규직 지지를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지지를 높이는 과제 자체가 현실적으로 장기간에 걸친 조직사업과 정치사업의 축적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편향된 친북행위가 시정되지 않아 진보적(강령적) 가치는 훼손되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에 편향된 친북행위는 없었다. 더구나 친북행위가 진보적(강령적) 가치를 훼손한다는 인식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친북정당 이미지가 누적된 반면 민생 서민정당 이미지 구축에는 실패했다>고 주장하지만 우선 친북정당 이미지가 누적된 사실이 없다. 평가서에서 친북정당이란 표현은 분단고착화를 반대하고 한반도평화와 남북화해통일을 지향하는 당이라는 것을 지칭하는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미지가 부각된다고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의 득표에 불리하게 작용할 리가 없다.

더구나 이런 이미지가 민생정당 이미지에 구축에 실패한 요인으로 되는 것을 묘사한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다.

이는 분단체제에 갇힌 가치관과 반복대결이념이 낳고 있는 허상에 불과하다.

민주노동당 발전방안

당원운동을 출발점으로 당의 재도약을 이룩하자

- 김 창 현(민주노동당 전 사무총장)

당 발전 기본방향

당 발전방향은 특정한 의견이나 주장을 관철하거나 당면한 사안만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당 발전방향은 당의 총적목표인 진보진영의 집권과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진보적 변화를 실현하는 길을 개척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기본방향을 먼저 정하고 이에 따라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선평가 등을 통해 기본적으로 제시된 당의 현실과 과제에 기초하여 다음을 당 발전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한다.

1. 신뢰성 있는 대안정당의 면모 확립
2. 민중을 정치적으로 조직하는 역량 구축
3. 전략적 기능과 정책 능력 향상

1. 신뢰성 있는 대안정당의 면모 확립

대선에서 확인되었듯이 대중들에게는 현재의 민주노동당을 집권정당으로 삼고 지지할 만한 이유가 부족하다. 차별성 있는 정책이 없었다든지 관심을 끌만한 정치적 이슈를 제시하지 못했다든지 하는 평가는 일견 옳은 말이지만 그것만으로 대중들이 민주노동당을 지지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진보정당으로서 한국사회의 미래상, 진보적 담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중들, 심지어 지지자들조차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면 한국사회의 근본문제 해결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에는 대중의 고개를 끄덕이

게 만드는 주장, 민중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는 포부,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비전이 없다.

대중들은 자신의 처지가 근본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란다. 이명박 또는 보수정당의 다른 누구를 지지하지만 이들이 집권하면 자신의 처지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진보정당이 대중의 지지를 받는 길은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는 정치세력으로 인정받고 신뢰를 얻는데 있다. 보수정당과의 차별성이 여기에 있으며 보수정당에 대한 우월성도 여기에 있다.

생태환경, 소수자문제 등 다양한 부문과 개별적 요구를 당에 수렴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은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는 지향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외면하거나 이탈하는 것으로 되면 진보정당으로서 자기부정이 되며 대중적 기반을 상실하고 약화 소멸되는 길로 가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진보적 변화, 대중의 처지에 근본적 변화를 이룩할 진보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 민중을 정치적으로 조직하는 당원 역량 구축

진보정당의 힘은 대중을 계급의식, 진보적 지향으로 무장시키고 정치적으로 조직하는데 있다. 진보정당의 발전을 가로막는 법과 제도가 엄연히 있고 당의 현재 역량이 매우 미약하지만 지배질서의 높은 벽을 허물고 한국사회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리고 이것은 민주노동당 당원들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는 일이다.

그런데 대중을 조직해야하는 당의 일선정치활동가인 민주노동당의 당원이 처한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진성 당원 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당비 납부와 각종 선거 외에 일선 당 활동에 참여하는 당원의 비중을 그리 높지 않다. 많은 당원들은 주민과 대중을 정치적으로 조직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당원들의 열성과 활력이 약화되어온 것이다. 이에 대해 당내 자주파의 패권주의에 책임을 묻는 주장이 있다. 여러 가지 부정적 현상과 결과로 인해 당원들을 소극화 시킨 문제는 심각하게 되돌아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것이 당원의 열성과 활력을 약화시킨 모든 원인이라 볼 수 없다. 각종 공직선거에서 거둬진 패배로 인한 결과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이는 원인과 결과를 뒤집어 놓은 것이다.

당원의 활력이 저하된 것은 정치 환경과 관련되어 있지만 주되게는 당원사업의 부족점과 결함이 낳은 결과이다. 당은 당원의 역량을 높이고 당의 정치 간부를 육성하는 일에 선차적인 힘을 기울이지 않았다.

당은 당원들에게 당이 계획한 사업을 집행하기를 요구하였으며 각종 의결기구와 선거에서 결정권을 가진 사람 이상으로 대하지 않았다. 사업계획과 각종 주장이 당원에게 일방적으로 전해졌다. 민주노동당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지향과 요구는 충족되는 공간을 찾지 못하였다. 준비를 갖춘 일선활동당원들도 당업무의 소모적인 과정을 겪으며 소극화되었다.

당원들은 당에 흥미를 잃어가고 간부역량은 크게 신장되지 못하였다. 당의 사회적 지위는 높아지고 당 대열을 확대되었으며 당에 재기되는 사업과 활동이 대폭 늘어나고 복잡해졌으나 이를 담당할 수 있는 당 간부대열은 그에 맞게 늘어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당이 일정한 규모에 이르자 분회구조를 비롯한 당원체계가 무력화되었다. 분회장 대회를 비롯하여 일선 당원이 참여하는 사업이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원내진출을 기점으로 중앙당과 시·도 당에서 대거 요구되기 시작한 간부역량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문제를 낳았다. 이 결과 당의 사업과 정치활동이 높아진 당원의 요구와 대중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상이 심화되었다. 주체적 측면에서 보면 오늘의 당의 위기의 핵심은 근본원인은 여기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정파대립 갈등구조가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현실적인 사건들을 보면 적절한 지적이다. 정파구도가 이를 가로막고 장애를 조성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와 책임이 어느 편에 있건 정파적 구도에 매몰되어 당을 대하고 사업해온 데 대해서는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당내의 의견차이가 조직적 대립으로 격화되고 분열을 낳게 된 것은 당원대중이 당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의 위기를 해결하고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는 핵심적인 방도는 당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당원이 당 쇄신에 나서면 당내 대립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당원이 나서서 기층 민중을 조직하고 대중 정치 사업을 벌여나간다면 흐려진 대중적인 당의 영상도 개선될 것이다. 당원의 힘을 발동하는데 현재의 위기는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일선당활동가와 당원에 대한 사업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당원들의 정치생활을 다양한 방법과 수준에서 보장해야 한다. 당원들을 대중 정치 간부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하는데 재정과 인력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

3. 전략적 기능과 정책능력 향상

민주노동당에는 정치가 없다는 비판을 많이 받는다. 정책정당을 표방하면서 대중의 지지를 받는 정책은 별로 없다는 지적이 있다. 당의 정책이 대중의 관심을 받지 못하자 기발한 착상, 특별한 건수에 매달리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대중들의 생활상 절실한 요구와 동떨어진 개별지식인 취향의 정책을 내놓거나 진보적 지향과 어긋나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다.

가장 큰 원인은 전략적 구상이 없고 전략적 판단 없이 각자가 개별사안으로 대하는 데 있다. 진보정당의 정책은 계급적 이해관계에 철저히 입각하고 대중운동의 역동성에 의거해야 하며 정치정세를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당의 정책은 이와 같은 전략적 구상과 판단이 선행되지 않고 개별내용에 대한 이론적 판단이 결정권을 행사하였다.

이렇게 되니 당의 정책과 정치활동이 이해관계가 있는 계급과 계층을 결집시키지 못하고 논란을 초래하기 일쑤였다. 비정규법안에 대한 모호한 태도를 취했던 초기 입장이나 화물노동자 유류세와 농민 면세유, 어민의료보험인하반대 등과 같이 당을 곤란한 지경으로 빠트리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진보정치연구소는 개인견해를 당의 이름으로 유포하였고 정책위원회는 논란과 시비의 진원지가 되기 일쑤였다.

정책역량이 부족한 것도 원인의 하나이다. 수 십 명의 정책연구원이 있었지만 원내 활동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원내 활동에서 쌓인 경험과 역량은 의원실에만 머무르고 당의 자산으로 되지 못하였다. 당 지도부, 중앙당의 일상적 정치활동을 정책적으로 보좌하는 기능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였다.

전반적인 경제정책, 도시서민과 중소기업인에 대한 정책, 지역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으나 해결될 기미가 없다. 당의 정책기구들은 당이 설정한 정치방향에 따라 정책을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라 개인연구실과 다름없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여기에는 당의 구조와 개별연구원의 성향이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겠지만 당의 정책을 마련하기에 역량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고 보아야 한다.

먼저 전략적 구상과 판단 기능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당의 일상 활동과 동떨어진 연구소같이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당의 전략적 기능은 당의 일상 활동과 밀접히 결합되어야 하며 현안과 정세에 따라 당에 필요한 정치적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전략과 정치방침을 선행하는 원칙에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이것은 정책담당 인원을 늘려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다. 진보진영의 정책을 당 정책으로 만드는 방도를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3. 기본방향에 따른 목표

발전방향은 기본방향에 따른 구체적인 목표를 가져야 한다. 각 발전방향에 따른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신뢰성 있는 대안정당의 면모 확립

민주노동당이 한국사회를 책임질 수 있는 신뢰성 있는 대안정당으로 대중들에게 인정받고 광범한 지지를 획득하려면 지향이 뚜렷하고 방식이 새로워야 하며 정치활동의 성과가 있어야 한다.

- 1-1. 한국사회의 특성과 진보운동의 지향에 맞는 진보적 담론을 제시한다.
- 1-2. 계급정당 대중정당으로서 진보정당의 활동방식을 구현한다.
- 1-3. 진보적 의정활동의 전형을 확립한다.

각항의 세부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 1-1. 한국사회의 특성과 진보운동의 지향에 맞는 진보적 담론을 제시한다.
 - ① 자주와 평등의 이념이 구현된 새 사회상을 제시한다.
 - ②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 등 민중의 당면한 생활상 요구와 이익을 옹호한다.
 - ③ 각 계 각 층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수렴한다.

1-2. 계급정당 대중정당으로서 진보정당의 활동방식을 구현한다.

- ① 기층 계급의 대중조직을 당의 주요 조직역량으로 삼는다.
- ② 합법정당에 맞는 대중 정치전의 전형을 마련한다.
- ③ 진보정당, 대중정당에 맞는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한다.

1-3. 진보적 의정활동의 전형을 확립한다.

- ① 의정활동과 대중운동을 적극적으로 결합시킨다.
- ② 원내 활동의 당성을 강화하고 원내외의 일치성을 높인다.
- ③ 당을 대변하는 정치인을 육성하는 장단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1. 한국사회의 특성과 진보운동의 지향에 맞는 진보적 담론을 제시한다.

민주노동당은 진보정당이므로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새로운 사회상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당원들과 대중들은 민주노동당이 건설하고자 하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알 길이 없다.

당 강령에서 이에 대해 천명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어렵고 구체적이지 않으며 상호 모순되는 내용이 많다. 또한 당 강령 제정이후 원내정당으로 발전한 당의 위상과 정세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대중들은 물론 당원들 심지어 당 간부들조차 당 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진보정당이 자신이 지향하는 명확한 사회상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은 심각한 일이다. 대중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관심도 없는 당 강령은 있으나마나한 것이다. 강령은 당원들의 정치적 입장을 일치시키는 기능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북 핵 논란에서 보듯 주관적 해석과 확대적용으로 논란과 갈등을 낳는 근거가 되고 있다.

종 북 척결과 같은 시대착오적인 주장이 당내에서 나오는 것, 보수정당과 다를 바 없는 주의주장을 진보정당이 추구해야 하는 길이라고 하며 당을 분열시키는 행위가 벌어지는 것은 민주노동당이 지향하는 사회상이 불분명하고 당을 규제하는 정치적 방향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새로운 사회상은 한국사회의 현실과 진보운동의 단계에 맞게 제시되어야 한다. 자주와

평등은 실천으로 검증되었으며 진보운동의 조직적 기초를 반영하고 있는 당의 두 기둥이다. 자주와 평등은 또한 진보적 가치와 지향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이에 튼튼히 기초하여 새로운 사회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제시하는 새로운 사회상은 대중들이 알아듣기 쉽고 계급적 이해관계와 진보적 지향을 추동할 수 있어야 한다. 진보정당의 정강정책은 대중 자신의 것으로 될 때 의미가 있는 것이며 실현시킬 힘을 갖게 된다. 따라서 널리 알려지고 명확히 전달될 수 있는 사회상을 제시해야 한다.

진보정당은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치조직이며 현실정치에서의 기층 계급의 정치적 대표체이다. 따라서 민중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주요한 사명과 역할이다.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의 당면한 생활상 요구와 이해관계를 실현하는 방도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활동을 벌여야 한다. 당이 조직들은 해당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가져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중정치활동, 의정활동을 일상화해야 한다.

당의 정강정책은 당의 다양한 구성과 요구를 반영해야 하며 진보진영 각계각층의 이해관계를 수렴해야 한다. 당의 외연을 확장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하는데서 계층과 부분의 요구를 진보적 지향과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꾸준히 벌어져야 한다.

2. 계급정당 대중정당으로서 진보정당의 활동방식을 구현한다.

사회적 운동은 정권을 쟁취하기 위한 단계로 발전하게 된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진보운동의 산물이며 진보운동 그 자체이다. 이는 민주노동당의 창당발전과 발전과정, 조직적 기초가 증명 하고 있다.

그런데 운동권정당, 민주노총 당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기층 대중조직과의 조직적 관계를 약화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폐쇄적 이미지를 없애야 한다는 것, 조직되지 않는 다양한 처지에 있는 민중들의 요구와 의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이들을 지지자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틀린 이야기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여기에는 진보운동과 민주노동당을 분리시키고 기층대중조직과 당을 별개로 보는 물역사적 물 계급적 견해가 있다. 이런 길을 가면 당이 더 광범한 대중의 지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대중적 기초를 상실한 이벤트정당, 개별정치인의 구락부로 될 것이다.

그런데 부문할당제와 같은 방식으로 기층 대중조직과 당을 결합시키는 것은 이전의 실정에 맞는 낡은 방식이다. 이는 당에게는 정치활동을 제약하고 대중단체에게는 정치적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당과 대중단체의 이견을 조직간 갈등으로 확대재생산하는 폐해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의결이나 선출직 등에 일정 권한을 배분하는 것에서 당사업과 활동, 의결과 집행에 기층 대중조직이 직접 결합하는 보다 적극적인 방도를 강구해야 한다.

진보정당은 의회활동뿐만 아니라 대중정치투쟁을 자신의 주장을 실현하고 대중을 조직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한다. 그런데 합법정당, 원내정당에 맞는 대중정치투쟁을 벌이지 못하고 도식적인 집회 시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는 당 역량을 소진시키고 부정적 이미지를 남게 되었다. 이러다보니 당내에서 대중정치투쟁의 중요성을 부정하고 무용론을 주장하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진보정당, 합법정당에 맞고 대중의 관심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대중정치투쟁을 구현하는 것은 절실한 요구이다.

당은 진성 당원 제에 의한 당비와 특별당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재정 자립율이 다른 보수정당에 비해 월등히 높다. 하지만 소요되는 재정을 다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당 조직이 확대되고 각종 선거 출마가 많아질수록 재정압박은 더 심해지고 있다. 실제로 지역 당 조직들은 선거 때 소요되는 재정을 총당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상당부분이 개인의 몫으로 떠넘겨지고 있다.

중앙당의 간소화와 지역 위 구조개편 등으로 경상지출을 줄여야 하지만 이것만으로 재정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매년 민주노총 조합원을 중심으로 한 세액공제특별당비만을 바라 볼 수도 없다. 근본적으로 요구되는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 진보적 의정활동의 전형을 확립한다.

인기 있는 민주노동당 의원은 있지만 민주노동당은 인기가 없다는 말이 있다. 의정활동이 당의 사업으로 되지 못하고 개별의원들의 활동으로 되는 현상은 국회에도 있고 지방

의회들에도 있다. 여기에는 의정활동의 경험이 적고 의회에 진출하는 사람들 중 당성이 높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작용하였다.

그러나 원내정당이 되었음에도 당의 구조와 체계를 그에 맞게 발전시키지 못한 것이 이유이다. 당의 대중적 대표성이 원내와 원외로 이원화되고 중앙당과 의정지원단이 별개화된 것은 원내진출의 성과를 확대하지 못한 것, <거대한 소수전략>을 좌절시킨 가장 큰 이유의 하나다.

대중투쟁에서는 의원들에게 지지지원활동을 끊임없이 요구하였고 의원들은 국회의원의 위상과 역할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심화되었다. 당은 판단하고 조율하는 기능을 상실한 채 일정을 정하는 단순연락기능 이상을 하지 못하였다. 나중에는 당은 배제되고 의원과 대중조직이 개별로 소통하는 현상이 일반화 되었다.

대중투쟁과 원내 활동의 불일치와 갈등은 해결해야 한다. 대중투쟁을 원내정치전의 동력으로 삼고 원내 활동이 대중투쟁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전략과 전술을 논의하고 구체적 방도를 정하는 구조와 기능이 마련되어야 한다.

의원은 당이 의회에 파견한 대표자이므로 일정한 당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당에는 그런 제도가 없다. 그러다 보니 부문의 의원인지 당의 의원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입장과 상반되는 의원활동을 하기도 하고 개별국회의원이 전체 당조직위에 올라앉으려는 현상까지 있었다. 창당 8년이 되었고 원내진출 4년이 지났지만 당 활동 속에서 대중정치인으로 성장한 당원이 드물다.

당성을 의원후보를 선출할 때 중요한 기준이 일정한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대표적인 정치인을 당 활동 속에서 당이 조직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2. 민중을 정치적으로 조직하는 역량 구축

기층 민중을 중심으로 광범한 대중을 조직하려면 당원의 역량이 마련되고 대중조직의 기초가 튼튼해야 하며 대중성이 높아야 한다.

2-1. 당원 역량 강화 사업을 당사업의 제일 앞에 둔다.

2-2. 당 체계에 당의 대중적 조직기초를 반영한다.

2-3. 대중의 참여가 가능한 당으로 변모시킨다.

각항의 세부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2-1. 당원 역량 강화 사업을 당사업의 제일 앞에 둔다.

- ① 전체당원이 참여할 수 있는 일상적 정치 사업을 전개한다.
- ② 당 학교, 양성과정 등을 통해 당 간부를 대대적으로 육성한다.
- ③ 당 조직 상 하간, 당원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

2-2. 당 체계에 당의 대중적 조직기초가 반영되도록 한다.

- ① 당 체계에 기본계급 대중단체의 긴밀한 결합을 보장한다.
- ② 대중단체의 간부역량과 당의 간부역량을 순환구조를 마련한다.
- ③ 일선의 당 조직과 대중단체를 튼튼히 결합시킨다.

2-3. 대중의 참여가 가능한 당으로 변모시켜야 한다.

- ① 폐쇄적 이미지를 낳는 구조와 관행을 타파하고 공개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 ②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당 체제를 개편한다.
- ③ 기층당조직의 의결 집행구조를 지역대중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1. 당원 역량 강화 사업을 당사업의 제일 앞에 둔다.

당원은 최 일선에 나가있는 당의 정치적 선전자이며 조직자이다. 당은 정치조직이므로 사람들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고 정치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그런데 많은 지역당 조직에서는 대중정치 사업을 제대로 벌이지 못하고 있다.

이를 수행할 역량이 마련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당 조직에도 당원은 있으며 일정한 당체계도 있다. 지역사업을 전개할 역량이 있는 당 조직에서도 대중단체와 다를 바 없는 활동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당원도 있고 당체계도 있는데 대중정

치활동이 없는 것은 당원을 육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간 당의 교양체계, 당원육성기구는 거의 붕괴되고 실종되었다.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때문이기도 하고 높아진 당사업의 요구를 해결해줄 교육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일선당원들은 소모적 과정에 시달려 지치고 있으며 신생 당 조직들은 다른 당 조직들이 이미 경험한 잘못과 실패를 답습하고 있다. 당교양기구와 체계를 복구하고 정치포럼, 당원학교, 간부양성과정 등 당원교양, 간부양성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여야 한다. 정기적인 심포지움이나 당 사업 경험토론회 등을 통해 소통구조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상호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면 기증당조직과 지역사업의 발전 속도를 높일 수 있다.

2. 당 체계에 당의 대중적 조직기초가 반영되도록 한다.

당의 지도력은 임기에 의해 단절되고 있다. 진보진영의 간부역량도 단순 교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과 진보진영의 순환구조를 만들어 이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 순환구조가 정착되면 진보진영의 지도력이 당의 정치력으로 안착될 것이다. 당의 간부들이 기층대중조직과 순환하는 것은 당의 계급성과 대중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강화하는데 필요한 일이다.

일선 당 조직에서는 노동조합이나 농민회, 진보단체간의 구분선이 없어져야 한다. 연대조직을 만들어서 해결하는데 매달리지 말고 조합원, 회원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꾸준한 일상적 활동을 통해 이루도록 해야 한다.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대중의 참여가 가능한 당으로 변모시켜야 한다.

진보진영에는 법적 제도적 제약으로 당원으로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다수 있다. 여러 조건으로 인해 당원으로 활동하기 부담스러워 하는 지지자들도 있다. 진성당원제의 문턱은 당과 대중을 갈라놓는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대중을 주체로 내세워야 하는 진보정당이 대중과 담을 쌓고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현상은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진보정당이면서 당의 운영과 내부사정에 대해서 널리 알리는 노력을 가장 게을리 하고 있다. 당원들조차 당에서 벌어지는 일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지지자와 지역주민들이 당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대중에 열린 당,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당으로 만들어야 한다.

3. 전략적 기능과 정책 능력 향상

현안과 사안을 제때 파악하고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전략적 능력을 발휘하고 정책을 제시하고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강한 정치적 지도력이 필요하며 진보진영의 정책역량을 당의 정책으로 해야 한다.

3-1. 당 지도부의 정치적 지도력을 강화한다.

3-2. 전략 기능을 중심으로 정책구조를 개편한다.

3-1. 당 지도부의 정치적 지도력을 강화한다.

① 당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의결기구를 효율성 있게 개편한다.

②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보좌하는 전략기구를 설치한다.

3-2. 전략 기능을 중심으로 정책기구를 개편한다.

① 정책위원회는 정책관리기능을 위주로 최소화 한다.

② 진보진영의 연구소 등 정책역량과 협력체체계를 구축한다.

1. 당 지도부의 정치적 지도력을 강화한다.

현재 당의 위기는 당지도력의 부족이 초래한 결과이기도 하다. 당지도력이 약한 것은 지도부의 능력도 크게 관련되어있지만 당의 구조적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선출직 임기제인데도 권한은 약하고 책임을 따지는 풍토가 강하다. 비대한 지도부는 결정권을 행사하기보다 원만한 조정에 매달려야 한다. 정치적 판단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조건은 없고 실무적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도식적 사고가 당의 정치력을 제약하고 지도부의 무능을 초래하고

있다. 당 지도부의 권한을 정당의 지도부답게 강화해야 한다. 복잡한 상황에서 판단하고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

신속하고 정확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의결기구를 개편해야 한다. 최고위-중앙위-대의원대회를 거치는 중복심의를 없애야 한다. 최고위원회는 수를 조정하여 실질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만들며 실무집행기구처럼 된 현상을 극복하고 지도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중앙위원회도 효율 성있게 규모를 조정하고 중앙위원회- 대의원대회의 상호 관계도 재정립해야 한다.

2. 전략기능을 중심으로 정책기구를 개편한다.

민주노동당의 정책에는 전략과 정치가 없다. 이는 당의 정책이 실현성이 약하고 대중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이다. 당 정책기구를 전략기능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덩치만 크고 효율성이 낮은 정책위원회를 전략팀으로 간소화해야 한다. 정책을 당에서 다 만들려 하지 말고 진보진영의 정책역량과 긴밀히 연계하여 현장성이 있고 구체성이 높은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4. 당면 실행계획

기본방향과 목표에 대한 전체 실행계획은 추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당에 조성된 문제를 해결하고 총선승리를 이루기 위한 당면 실행계획을 기본방향과 목표에 입각하여 제시한다.

1. 정책과 정치적 구호

3대 정책을 구체화한 슬로건을 제시하고, 3대 현안에 대한 정치선전을 강화하며, 수구보수 회귀를 저지하는 대중운동을 기본 기조로 한다.

1) 3대 정책

- 비정규차별 철폐, - 청년실업 해소, - 교육 보육 의료 공공성 강화

2) 3대 현안

- 한미FTA 비준, - 삼성재벌 불법비리, - 환경파괴 개발정책

3) 보수회귀 저지

-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운동 탄압책동 대응, -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권리 약화 저지
- 남북관계 후퇴, 친미사대정책 반대

2. 중앙당 - 지역위원회 개편

당면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효율적이고 선거투쟁에 적합한 조직과 체계를 갖춘다.

1) 중앙당

지도부 권한 강화

- 각 의결기구는 총선투쟁에서 필요한 권한을 위임에 의해 최대한 부여한다.

중앙당 간소화

- 의정지원단과 사무총국의 기능과 조직을 통합한다
- 조직관리, 선거관련업무 위주로 간소화한다.
- 부분과제별 위원회는 진보진영 공동선본체제에 통합한다.
- 정책위원회는 전략팀으로 단순화하여 재구성한다.

2) 지역조직

- 지역위원회의 상설사무소와 상근제도를 폐지한다.
- 당원사업은 시 도 당에서 통합한다.

- 지역사업과 선거운동은 지역 거점을 활용한다.

3. 당선 전략

실질적인 득표활동을 벌여야 한다. 대중 속으로 운동으로 10만 당원을 발동하고, 노동조합 농민회 진보단체의 역량을 선거투쟁에 결합시켜, 지역주민의 투표를 구체적으로 조직한다.

1) 지역구 돌파

-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역량을 집중한다.
- 당헌 당규 상 후보선출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2) 비례후보 다수당선

- 후보군에서 당의 정치적 대표성을 부각시킨다.
- 민주노동당 후보 전략을 구사한다.

4. 당 확대 발전

총선투쟁을 당의 확대 발전의 계기로 삼으며 이에 기여하도록 한다.

총선이 민주노동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진보진영 전체의 과제라는 공동의 인식에 기초하여 연대의 차원을 넘어서 단일조직으로 선구투쟁을 수행하도록 한다.

당의 외연에 있는 진보적 성향의 그룹과 정치적 연대전선을 구축하여 이명박 정권의 공세에 대한 대응력을 구축한다.

2) 지도체계

진보진영의 역량을 총동원하기 위한 방안

지지자와 우호적 인사들을 결합시키기 위한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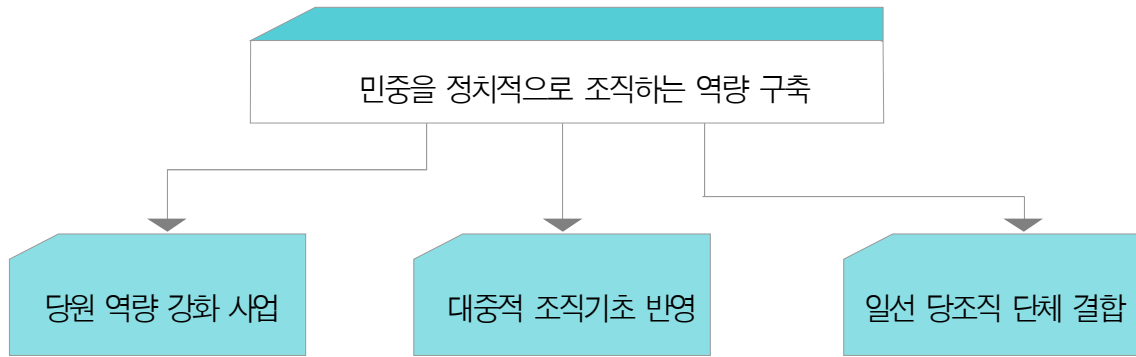
<신뢰성 있는 대안정당의 면모 확립>

진보적 담론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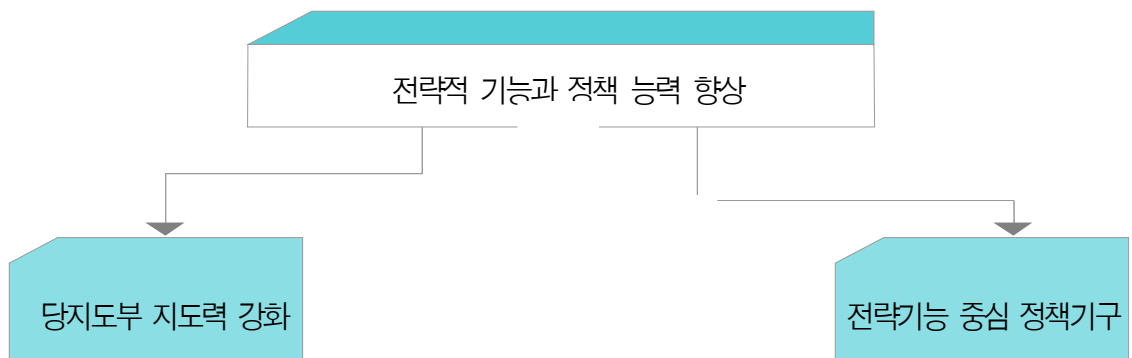
진보정당 활동방식 구현

의정활동 전형 확립

자주와 평등의 이념이 구현된 새사회상을 제시한다. 기층 계급의 대중조직을 당의 주요 조직역량으로 삼는다. 의정활동과 대중운동을 적극적으로 결합시킨다. 민중의 당면한 생활상 요구와 이익을 옹호한다. 합법정당에 맞는 대중 정치전의 전형을 마련한다. 원내활동의 당성을 강화하고 원내외 일치성을 높인다.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수렴한다. 진보정당, 대중정당에 맞는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한다. 정치인을 육성하는 장단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전체당원이 참여할 수 있는 일상적 정치사업을 전개한다. 기본계급의 대중단체가 당체계에 긴밀하게 결합한다. 폐쇄적 이미지를 낳는 구조와 관행을 타파한다. 당학교, 양성교정 등을 통해 당근부를 대대적으로 육성한다. 대중단체의 간부역량과 당의 간부역량이 순환한다. 일상적인 정치활동이 가능한 당체제로 개편한다. 일선적인 정치활동이 가능한 당체제로 개편한다. 당조직 상하간, 당원간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 일선의 당조직과 대중단체를 튼튼히 결합시킨다. 의결 집행에 지역대중의 참여를 보장한다.



당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의결기구를 효율성있게 개편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보좌하는 전략기구를 설치한다. 구축한다.

정책위원회는 정책관리기능을 위주로 최소화 한다. 진보진영의 연구소 등 정책역량과 협력체계를

주인이 주인 노릇 당당하게 하십시오!

주대환(민주노동당 전 정책위의장)

먼저 민주노동당의 오늘의 위기에 책임이 있는 한 사람으로서, 살림 말아먹은 머슴으로서 민주노동당의 진정한 주인이신 대중 단체 여러분에게 고개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신 4개 대중 단체 조합원, 회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넉넉하지 않은 주머니를 털어서 당비 내고 후원금 내서당을 만들고 운영해왔는데, 언제 다 갚을지 모르는 막대한 빚만 남기고, 노동자 대중정당, 노동자 농민의 정당, 일하는 사람들의당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사실은 운동권 ‘청년당’을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뵈면 면목이 없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저 같은 ‘운동권’ 출신 머슴들이 주인 노릇한 데 있는데, 다시 저가 뻔뻔하게 나서서 무어라고 떠드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불러주시고, 관대한 주인이 살림 다 말아먹은 머슴들에게도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니 송구함을 무릅쓰고 감히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며칠 전까지 마산 댕거리 분회장을 했습니다만, 1997년 국민승리 21 마창지부 공동 대표를 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지난 10년 동안 민주노동당 간부 생활을 하면서 느낀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주인의 무관심, 평당원들의 무관심, 노동자 당원들의 무관심, 소박한 노동자 당원들의 생각을 대변해주셔야 할 민주노총 집행부의 무관심, 소박한 농민 대중의 생각을 그대로 대변해야 할 전농 집행부의 무관심이었습니다.

이른바 “몸 대고 돈 대고” 하는 대주주인 민주노총은 왜 그만큼 많은 투자를 해놓고도 자회사인 민주노동당에 대한 경영전략이 없나, 민주노동당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를 연구하는 팀조차 없나, 하는 의문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머슴들을 너무 믿었던 게 아닌가 하는 말씀입니다. 머슴이란 어디까지나 머슴입니다. 주인만이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머슴들끼리 싸우는 소리가 하도 요란하니까, 막말을 주고받다가 주먹을 주고받더니 급기야 돌맹이를 주워서 서로 때리고 어떤 높은 집을 뛰쳐나가는 지경에 와서야 “왜 이리 시끄럽노? 무슨 문제가 있기는 있는가며?”하고 이제야 관심을 가져주시니 이제 살림 말아먹은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머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냉정한 판단을 내리셔야 할 때인데, 그렇다면 이 자리는 너무 늦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슴들이 많다보니 쉽게 구분하려고 무슨 별명을 붙여서 NL이니 PD니 하는 데요

참고로 저는 SD입니다. 머슴들이 서로 곳간 열쇠를 가지려고 싸우는데 가장 믿을만한 머슴이 SD입니다.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충직하고 일 잘 하면서도 세경 적게 쥐도 불평 안 하는 놈이 제일인데 NL이란 놈은 착하고 부지런하기는 한데 지난 60년 동안 세상 바뀐 줄을 잘 모르고 배도 크고 딸린 식구도 많아 세경을 많이 달라고 해서 안 되고 PD란 놈은 잘난 체 하지만 사실은 갖췄똥이들이고 게으르고 예의도 없어서 안 되고 SD란 놈만이 쓸 만하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농담입니다. 저는 이른바 평등파, PD가 아니라는 뜻으로, 머슴을 그렇게 두 종류로만 나누지 말아주시라는 뜻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민주노동당을 뛰쳐나가겠다고 협박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당’이라서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이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거를 나가거나 지역 활동을 하다보면 국민들이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을 전혀 구분을 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생활이 너무나 어려워니까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들 욕을 많이 하시면서 민주노동당을 싸잡아 욕하니 갑갑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건 인내하고 참으면서 우리나라 노동운동을 질적으로 발전시켜서 그야말로 노동자 계급 전체를 위한 노동운동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장기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노총당’ 소리 그토록 듣기 싫으면 노동당 안 하고 녹색당 하면 됩니다. ‘데모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 FTA 막아내려고 데모 많이 했으니 그런 소리 듣는 건 감수를 해야겠지요.

그런데 ‘친북당’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정말 다릅니다. 그건 민주노동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민주노동당이 소박한 노동자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머니를 털어서 만든 독립적인 대중정당이 지 무슨 특별한 사상이나 이념을 앞세워서 대중의 상식과 어긋나는 일을 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는데도 선군정치 노선을 고집하면서 정권 안보에만 매달리는 북한의 현정권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북한 정권과 무슨 관련이라도 있거나 혹시 조선로동당 2중대는 아닌가 하는 왜곡된 이미지를 가지고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믿고 들어주시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무슨 이야기인가보다는 누가 하는 이야기인가에 따라 믿고 안 믿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의 정체성의 문제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진보정당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조봉암 선생님이 북한 공산주의 정권과는 일선을 분명하게 그었고 “자본의 독재도 반대하지만 공산당 일당 독재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천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은 여운형 선생님을 이어받은 위대한 민주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으신 분이고 우리 민주노동당의 당명에 있는 ‘민주’라는 단어도 바로 그런 정신을 이어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점은 민주노동당이 강령에도 어느 정도는 명시되어 있고, 창당 당시에 ‘노동당’이란 당명을 반대하신 분들도 그런 오해를 받지 말자는 취지였지만 우리가 정면 돌파를 해서 국민들도 어느 정도는 용납하고 이해를 하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일심회’ 사건 당시에 대응을 잘못하고 책임자들의 몇 차례 발언이나 대선 공약 등에서 오해를 살 부분이 있어 국민들이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면 그 문제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대위의 안이 지금 민주노동당의 새출발, 재창당, 진보대연합을 통한 진보신당의 창당을 하기에 앞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보고, 지지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이렇게 된 데에는 ‘일심회’ 사건 당시에 대응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사건 발생 서너 시간 안에 “국민 여러분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대국민 사과를 했어야 합니다.

이 때 우리가 사과를 해야 할 국민은 원래부터 민주노동당을 지지하지 않거나 관심 없거나 민주노동당을 ‘빨갱이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에 호감을 가졌던 분들, 민주노동당을 지지했거나 도와주었던 분들에게 사과를 하고 그 분들의 상처받은 마음과 자존심을 위로해야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그리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요즘은 국민들이 ‘간첩’이라면 뭐 대단하게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아직도 그리 철없는 아이들이 있나, 아, 그래 민주노동당 같은 동네에는 그런 놈들도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즉각 우리 당 스스로 진상을 조사해서 사무부총장이라는 요직에 있는 당직자로서 오해를 살만한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국민의 상식에 비추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를 했다면 당이 그리 큰 타격을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작정 조작이라고 우기고 국정원 앞에 가서 데모하고 법원 가서 소란 피우고, 그건 분명히 ‘오버’였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지금이라도 무언가 조치가 필요한 거지요. 물론 최기영 씨 본인으로서야 억울한 점도 있겠지만 원래 정치를 하다 보면 억울할 때도 있고 대(大)를 위해서 소(小)를 희생하고 당과 계급을 위해서 개인은 희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에 대한 충성의 길이라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면서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노동당의 모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주인이 주인 노릇을 하시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대중 단체들이 나서십시오. 주인이 주인 노릇 당당하게 하십시오. 머슴들로부터 공간 열쇠를 뺏으십시오. 자회사에 사장을 파견하여 직영을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문제 다 풀립니다. 이제 대중 단체들이 나서서 통 크게 2월 3일 전당대회 성사시키고, 비대위 안을 통과시키고, ‘진보대연합을 통한 재창당’을 해서 총선 투쟁 갑시다.

민주노동당 혁신은 단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 박희진(한국청년단체협의회 부의장)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학생, 여성 등 이 땅의 민중들이 민주노동당을 지지해온 역사는 민주노동당 만이 우리 민중들의 이익을 대변하여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투쟁의 역사이다.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또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새시대, 신자유주의의 고통에서 벗어난 민중집권의 새시대를 열어나갈 진보정당은 민주노동당이라는 믿음으로 지지 강화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현재 민주노동당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논란은 도저히 ‘진보’라고 이름붙일 수 없는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것은 수십 년간 진보운동이 쌓아온 역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에서 활동하는 진보정당이라면, 분단으로 인해 고통받는 민중,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그 누구보다 먼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비전을 제시하고 선도해 나가야 할 망정, 수구보수세력들의 공안탄압의 무기로 사용되고 있는, 이미 법적 타당성도 없는 구시대 반민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들이대고 ‘중북’논란이니 ‘사건 관련자 제명’이니 하는 것을 거론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당사자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의 희생자인 두 동지들에게 공안세력보다 더한 낙인을 찍고자 하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조치이며, 특히 현재 이적단체규정으로 재판계류중인 한국청년단체협의회로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중북주의’이라고 명명한 순간, 그것은 민주노동당의 혁신을 위한 방도가 아니라 분단체제에서의 울가미를 들썩우고 수구보수세력들이 나서서 대서특필하게 하여 국민들에게 민주노동당에 대한 더욱 왜곡된 이미지를 고착화 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중북’논란을 주도하고 선동하는 것은 민주노동당을 분열 파괴시키고 나아가 진보운동 전체를 어려움에 빠지게 하려는 민중에 대한 배신행위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또한 그것은 ‘진보’의 깃발을 내던지고 이명박 정권하에서 반복시류에 편승하여 살아남아 보겠다는 전향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민주노동당은 더 이상 ‘중북’논란으로 분열할 것이 아니라, 17대 대선에서의 국민들의 엄중한 평가를 가슴에 새기고 단결하고 혁신해야 한다.

특하면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기성정당과 달리 단결로 혁신하고 강화하는 진보정당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기득권 세력들이 민주노동당의 영상을 왜곡하기 위해 만든 ‘민주노동당’ ‘친북당’이라는 딱지를 피해갈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민주노동당, 이 땅 노동자들의 당으로, 농민들의 당으로, 여성들, 청년들의 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민중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615공동선언이 발표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 가시화되고 있는 지금 평화와 통일의 비전을 선도하는 진정한 평화통일정당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고 통일을 방해하는 국가보안법 먼저 없애

나가는 진보정당이 되어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민중들의 염원을 실현하는 진정한 진보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하면서, 한 청 또한 더욱 광범위한 청년들과 함께 하는 대중조직으로 거듭나 민중이 주인되는 새세상을 위해, 민주노동당의 강화를 위해 복무해 나갈 것이다.

<첨부자료1> 공동성명서

[공동성명] 민주노동당은 단결하면서 혁신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대선에서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을 바친 민주노동당 당원과 당직자들에게 존경을 표하는 한편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단체로서 계급투표 조직화의 목표를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 반성과 책임을 통감하며 민주노동당의 혁신과 강화를 위한 입장과 각오를 표명하고자 한다.

민주노동당은 2007년 대선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에 대한 겸허한 반성과 혁신을 통해 새롭게 재도약해야 한다는 엄중한 국민적 요구를 받아 안았다. 그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지난 1월12일 제9차 중앙위원회를 통해 비대위를 구성하고 혁신을 결의했다. 그러나 혁신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당의 일부 세력이 지난 26일 소위 '새로운 진보정당운동 출범식'을 강행하였다. 이는 당의 분열을 기정사실화하고 가속시키는 행위로써 당의 혁신과 단결을 바라는 당원들의 노력과 진보정치의 발전과 성숙을 열망하는 민중들의 기대를 저버린 배신행위이다.

민주노동당의 창당정신은 작은 이념의 차이를 풍부한 실천을 통해 극복하고 모든 진보세력의 단결로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원칙 없는 신당추진은 서로 간의 견해 차이를 부풀려 적대함으로써 진보정치의 싹을 자르는 우를 범하는 동시에 과거 진보진영의 고질적인 분열상을 답습하는 구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더욱이 신당추진 세력이 부추긴 당의 분열이 민중운동 전체의 분열까지 야기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당 비대위는 이러한 분열행위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단결을 도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비대위가 혁신의 핵심내용으로 제출하고 있는 내용이 보수수구 반통일세력과의 투쟁으로 쌓아온 민중들의 통일운동 성과까지 유실시키고 진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 지금 현장에서는 “남북노동자의 연대사업과 통일농업사업조차 중복주의에 따른 것이냐?”는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민주노동당이 혁신하고자하는 본뜻과 다르게 민족적 과제인 통일운동까지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당이 하루빨리 소모적인 논란을 종식시키고 올바른 통일운동의 입장을 정립할 것을 요구한다.

민주노동당의 혁신은 철저하게 민중의 이해와 요구에 부합되는 내용이어야 하며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등 대중을 정치중심에 세우는 것이어야 한다. 이는 민주노동당을 통해 정치세력화하려는 대중조직의 혁신 또한 마찬가지이며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현장정치교육으로 민중을 진보정치의 주체로 확고히 세워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비정규법 전면 재개정, 한미 FTA 비준저지,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투쟁 등 당면투쟁을 성실하게 진행하면서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4월 총선 승리를 위하여 계급투표 조직화에 전력을 쏟을 것이다.

민주노동당 창당 후 8년은 진보정치실현을 위한 치열한 투쟁의 역사였다. 당이 진보정치의 깃발을 세운 첫 날부터 보수수구정치세력들은 진보정당의 앞길을 가로막고자 집요한 방해책을 획책하였으나 우리는 '민중이 정치의 주인'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의 깃발을 더욱 높이 들었다. 그 결과 2004년에는 열 명의 의원이 보수정치의 아성에 들어가 진보정치의 터전을 닦는 승리도 쟁취하였다. 그러나 진보정치 실현의 역사에 고난과 시련이 없을 수 없는바, 지난 대선의 패배를 소중한 교훈으로 삼아 더욱 혁신하고 단결하여 진보정치의 승리를 이루어가야 한다.

지금 민주노동당의 혁신과 새로운 도약을 열망하는 국민들은 총선을 앞둔 중차대한 시기에 당이 더욱 단결하고 혁신하여 명실상부한 진보정치를 펼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당이 겸허한 자세로 지지대중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민중들의 염원을 실현하는 진보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진정으로 바란다. 우리는 힘찬 총선투쟁 결의를 통해 민주노동당이 제1정당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임을 밝힌다.

2008.1.31

전국농민회총연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첨부자료2> 2월 3일 임시당대회 안건 1, 2

안건 1

제 2창당을 위한 평가와 혁신안 승인의 건

■ 안건 토론자료

17대 대선에서 얻은 3.0% 득표율은 2004년 총선 이후 민주노동당 활동에 대한 국민대중의 총체적 심판이다.

당은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사회적 약자들의 정당임을 표방했으나 일하는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들로부터 외면당했다. 당은 진성당원제를 토대로 한 당원 중심 정당임을 자임했으나 당과 당원들의 역량 결집을 이루어내지 못했고, 의회진출로 사회의제화의 공간을 확보했으나 대안적 의제 형성에도 실패했다.

우리는 지난 정치활동의 실패를 변명 없이 인정하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 대중들은 당 혁신을 국면적,전술적 문제라기보다 근본적 문제로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근본적인 당 혁신이 필요하다. 어설픈 미봉책으로는 대중들에게 실망과 분노만 안겨줄 뿐, 신뢰와 지지를 회복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당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서는 지난 시기 행해진 오류와 한계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 사실과 자료에 의거하여 실체를 파악하고 평가해야 한다.

제2창당은 민주노동당의 사활이 걸린 과제이다. 제2창당은 구호가 아니라 당의 잘못된 점을 당원과 국민 앞에 진솔하게 반성하고 뼈를 깎는 혁신을 수행하는 것이다. 제2창당은 일하는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정당, 당원과 국민들을 무서워하는 정당, 실력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것이며, 열린 자세

로 새로운 진보적 가치들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제2창당에 매진하라는 당과 당원들의 명령을 받들어 국민들에게 제2창당의 의지와 실천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노동당이 다시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1. 17대 대선 평가

1-1. 17대 대선 결과의 의미

1) 대선 결과는 참패

- 당 지지율은 1997년 대선 국민승리21의 1.2%에서 시작하여 2002년 12월 대선에서 3.9%, 2002년 6월 지방선거 비례대표투표에서 8.1%, 2004년 4.15 총선에서 비례투표 득표율 13.0%로 승승장구했음.
- 당 지지율은 2004년 총선 승리 직후 최고조에 달하여 20% 수준에 달했음.
- 그러나 2005년 말 이후 당 지지율은 10%내외에 머무르기 시작했고, 2005년 보궐선거와 2006년 지방선거에서의 패배 등, 2004년 총선 이후 4년은 당의 연속적 실패의 과정이었음.
- 마침내 2007년 대선에서 권영길 후보 712,121표 득표. 이는 전체 유권자의 1.9%, 투표한 유권자 3.01%.
- ‘712,121표’는 지난 대선에서 얻은 ‘957,148표’에 비해서도 245,027표가 부족한 결과. 12% (300만표)득표, 이를 통해 집권가능한 대안정당의 위상을 확보하고, 18대 총선 승리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애초의 목표에 비추어 보면 참담한 패배.

2) 대선 결과의 의미

- 2004년 이후 당 지지율의 지속적 하락과 연이은 선거 패배는 당 혁신을 촉구하는 국민 대중들의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당이 안이하게 대처해 온 결과임.
- 2004년 총선 이후 당세는 양적으로 확장되어 현재 당원 수는 두배

- 수준에 달하고 있음. 하지만 당원의 결속 및 국민 대중의 지지는 당의 양적 성장과 별개로 당 노선과 실천이 핵심문제임을 확인해줌.
- 당 지지층의 투표율은 74.7%로 한나라당 지지층 투표율 86.0%, 통합신당 지지층 투표율 84.4%에 못 미침. 게다가 투표에 참가한 당 지지층 가운데 23.5%만이 권영길 후보에게 투표했음.
 - 5년 전 민주노동당을 지지했던 유권자의 25.6%가 다른 정당을 선택했거나 투표를 포기했음.
 - 당 핵심 지지층의 충성도 약화와 잠재적 지지층의 이탈 현상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당활동과 대선전략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반영함.
 - 결국 2004년 이후 지속적인 당 지지율의 하락과 대선의 참패는 민주노동당의 기존 활동이 더 이상 국민대중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대중의 지지가 존립근거인 정당으로서 당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1-2. 선거 총평과 4년 평가

1) 노무현 심판론에 의해 여당과 동반 몰락함

- 노무현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존재하고 이것이 이명박에 대한 ‘문지마 지지’ 및 문국현 출마 등으로 이어짐.
- 민주노동당은 노무현-열린우리당과 함께 국민들 사이에 ‘진보-개혁’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었는데 이들이 몰락하자 함께 몰락함.
- 이는 지난 4년 동안 (신)자유주의 개혁세력과의 차별화에 성공하지 못한 민주노동당 스스로 자초한 것

2) 다자선거구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

- 다자구도는 민주노동당에게 유리한 점도 있고 불리한 점도 있음.
- 후보가 난립했다는 측면에서 그 자체로 당의 차별성을 드러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으나, 그 반대의 평가도 가능
- 오히려 대한민국 유일 진보정당을 자임하는 입장에서 선거의 구도는 결코 불리한 것만은 아니었음. 보수정당이 둘로 갈라졌고,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이 또한 둘로 갈라짐. 이들은 아무도 한-미 FTA, 비정규직 문제 등에 대해 말하지 않음. ‘삼성공화국’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음.

- 특히 1-2위 후보 사이의 월등한 격차로 인하여 선거 때마다 당 지지자들을 괴롭혔던 ‘사표심리’도 작동하지 않았음.
- 따라서 민주노동당이 ‘차별화된 진보’로 자기 입지를 구축했다면 이번 선거는 제1야당으로 성장하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될 수 있었음.
- 이런 이유에서 대선 패배는 외적 요인 탓이 아니라 당의 주체적 요인에 기인한 실패였음.

3) 대안의 의제화와 계급투표의 실패

-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로 유권자들의 절반이 넘는 52.7%가 경기회복.경제활성화를 꼽았음(갤럽조사 2007.11.25).
- 경제위기 이후 더욱 공세적으로 전개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하에서 고용 불안정은 심화되고, 빈부격차도 심화되었으나 이를 대선 의제화하지 못했음.
- 경제활성화와 국가경영능력이 지지후보 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고 있는 조건 속에서 민주노동당에 우호적인 층도 ‘국정운영능력.경험 부족’ (31.8%)과 ‘주장의 현실성 부족’ (18.5%)을 이유로 권후보에 투표하지 않았음(진보정치연구소 2007.12.20-28 민주노동당 호감층 조사). 민주노동당 우호 층조차 그 절반이 민주노동당을 대안적 정책정당 대신 무능한 정당으로 판정하며 외면한 것임.
- 결국 계급투표는 실현되지 못했고,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로부터도 외면 받게 되었음. 비정규직도 평균 투표를 80.7%보다 낮은 71.5%만이 투표했고, 투표한 비정규직 가운데 3.4%만이 민주노동당에 투표했음.

4) 진부한 선거운동 및 메시지

- 선거 메인 슬로건 ‘세상을 바꾸는 대통령’은 운동권에는 친숙하나 대중에게는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없었음. 특히 민주노동당이 대중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세상을 바꾸는 대통령’ 주장은 공허하게 들렸을 것.
- 선거운동의 전략 실종, 전략 부재 하에 조급하게 결정된 만인보, 집회 성사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던 백만 민중대회 등은 지난 4년간 보여줬던 주관주의적 정치활동, 동원위주의 구태의연한 사업행태가 반복된 것.

5) 민중들의 요구와 괴리된 소모적 논란

- 정책 생산 과정에서 코리아 연방 공화국 논란이 있었고, 이 문제가 언론을 통해 확대재생산됨.
- 국가비전을 둘러싼 내부 논쟁, 포스터, 유세차 문제 등으로 결국 당은 코리아 연방 공화국을 적극적인 슬로건으로 대대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이로 인해 불필요한 당력이 소모되고, 단일한 정책적 메시지 전달에 어려움 발생.
- 또한, 경제 등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선거쟁점이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 코리아연방공화국 논란이 전파되어 국민들의 요구와 괴리된 정당으로 비추어짐

6) 대선 과정에서 당의 단결 실종

-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일부 당원이 대선활동에 전력을 다하지 않거나 방관하는 일도 발생. 이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있어야 함.
- 그러나 이는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임.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경선 과정과 그동안 당 활동에서 고질화된 정파의 패권주의적로 인해 당내 활동가들 사이에 신뢰가 무너지고, 당 활동가들이 공유하는 전망이 붕괴한 데 있음.
- 당은 2004년 총선 직후 보여줬던 진성당원제 등 민주노동당의 진보적 제도를 잇는 새로운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지 못했으며, 당내 민주주의와 투명성은 지속적으로 후퇴했음.

7) 후보전술 측면

- 어떤 후보를 뽑는가는 당의 현재 상태와 당의 비전, 이를 실현할 의지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반영함. 이러한 점에서 대선후보가 당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에게 부합하지 못했음.
- 그러나 권영길 후보는 당원의 직선으로 뽑힌 후보임. 따라서 후보전술에 대한 평가는 가능하나, 개인에 대한 비난은 있어서는 안 됨.
- 다만,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어김없이 재현된 특정 정파의 패권주의적 행위가 대중 및 당원의 기대와는 어긋난 결과로 이어진 측면이 있음은 인정해야 할 것.

8) 대선패배를 당의 활동의 결과

- 17대 대선의 결과는 대선 전략과 대선 운동의 실패를 넘어서 지난 민주노동당 활동과 면모에 대한 국민대중의 총체적 평가임.
- 지난 4년 동안 민주노동당은 자유주의 세력과의 차별화에 실패함.
- 민중의 직접적인 생존, 경제적 요구에 대한 해결의지 및 능력부재로 대안정당으로의 성장이 지체됨. 형식적인 지역위원회 활동, 진보적 실험. 전국적 관심 촉발을 위한 적극적 실천 등이 부재한 지방자치단체 운영. 정책중심에 치우친 의회활동. 원내외의 통합적인 정치실천 미흡. 구체적 실천 활동 형태로서 가두집회만능주의 등이 문제. 국민대중들은 민주노동당을 ‘무능력한 아마추어 당’, ‘대안 없는 운동권 정당’ 이라고 평가함,
- 당의 노동정치가 민주노총으로 상징되는 ‘대기업-정규직 중심 노동조합운동’의 이미지를 넘어서지 못하고, 민주노총에게 맡기는 식으로 진행됨. 독자적 노동정치가 없었고 이에 대한 계획과 실천의 부재로 인해 비정규직의 지지를 얻어내는 데 성공하지 못함
- 당의 단결을 결정적으로 훼손한 정파 패권주의, 당내민주주의 왜곡 사태가 누적됨. 이에 따라 국민들에게 당은 정파간 다툼에 몰두하는 이미지로 비쳤으며, 당 핵심활동가들 역시 민주노동당 위기의 근원을 당의 지배구조와 리더십에 대한 회의와 불만에 두고 있음¹⁾
- 편향된 친북행위가 시정되지 않아 진보적(강령적) 가치는 훼손됐고 친북정당 이미지가 누적된 반면 민생 서민정당 이미지 구축에는 실패했음

2. 당내 쟁점 사안에 대한 재평가

2-1. 편향적 친북행위 관련

1) (소위) ‘일심회’ 사건과 관련

- 당원인 최기영, 이정훈이 북한 및 북한과 연계된 인물에게 전달할 것을 목적으로 당내 동향과 당직자의 신상과 성향을 분석한 자료를 유출한 것은 당헌이 정하고 있는 당원의 의무 중 당헌 · 당규를 지켜야할 의무 및 당의 기밀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임.

1) 민주노동당 조직진단팀, 「민주노동당 조직진단 결과보고서」, 2007. 1.10.

- 또한 당의 강령과 당헌 · 당규를 위반하면서 북한과 연계된 인물들에게서 지침을 받아 활동하며 당 내에 음성적인 조직을 결성하는 등의 활동은 명백한 편향적 친북행위임. 이러한 행위는 당의 독립성 · 독자성을 외면한 행위이며, 최고정치조직으로서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
- ① 당은 2006.12. 최고위원회 결의에 따라 소위 일심회 사건과 관련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고 최기영과 이정훈에 대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그와 같은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당의 친북적 이미지가 누적되었기에 지금이라도 최기영, 이정훈은 제명되어야 한다.
- ② 당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훼손시키려한 북한당국에 엄중 항의하며 이후 북한 당국은 남한의 진보정당운동에 대한 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 [관련 참고자료 추후 별첨]

2) 북핵 및 자위론 관련 건

- “북한의 2.10 핵 보유선언은 △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반전반핵의 당 강령과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추구하는 당 정책에 입각해 절대 용인할 수 없다” 는 요지의 결의안 채택 부결(2005년 2월). 북한 핵실험에 대해 논란 끝에 ‘유감’ 입장 표명. 당 정책위의장의 북핵 자위론 발언 등
- 이와 같은 사태는 어떤 국가이든 비록 ‘자위력’ 으로서도 핵무장을 하는 것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소위 ‘핵의 평화적 이용’ 이라는 원자력 발전까지도 명확히 반대하는 당 강령에 배치되는 것. 정책위의장의 북핵 자위론은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는 물론 영토 내 반입이나 통과조차 금지하는 당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으로 반전반핵 평화 정당의 강령 정신에 정면으로 반함.
- 아울러, 2003년 강태운 고문 사건, 북한인권, 탈북자, 국군포로 문제 등에 대한 외면.배제.회피 등으로 민주노동당의 친북정당 이미지 누적됨

- ① 민주노동당은 자위력으로서의 핵무장은 물론 소위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원자력 발전까지도 명확히 반대하고 있으며, 다시 한번 반전반핵 평화 정당임을 분명히 한다.
- ② 대선정책공약 중 ‘미군철수 완료시점에 북핵무기 폐기 완료’는 당론으로 정해진 바 없음을 확인한다.

2-2. 패권주의 및 민주주의 왜곡 건

1) 성격

- 당직 공직 선거과정에서의 소위 ‘세팅선거’ 및 지역 당권 장악을 위한 ‘위장전입, 당비 대납’ 문제 등이 계속 발생함. 이는 2004년 이전부터 발생하였던 문제이나 그 후과는 대단히 심각하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음
- 현재까지 각종 공직, 당직 선거에서의 세팅 선거 및 패권주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있었으나 번번이 좌절됨. 또한 이러한 사태를 일으킨 당내 정파는 이 문제에 대하여 단 한번도 책임을 인정하는 공개적 사과를 하지 않았음.
- 아래 사례들은 각급 당부의 당권 장악을 위한 일부 정파의 패권주의적 행태로부터 파생한 사건들이거나 당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거나 혹은 이와 관련하여 논란 중인 사건임

[당기위원회를 통해 사건의 사실 관계 중 일부가 확인된 사건]

-2000년 총선당시 울산북구 사건, 2001~2002년 서울 용산지구당 사건, 2002년 대선기간 중 당 공동선거본부 중앙선거대책위원 이○○등의 노무현지지 선언 사건, 2004년 광주 북구지구당 당비대납 사건, 2003년 경기도 의정부갑 지구당 창당 관련 사건, 2005년 인천 남구갑 당비대납사건, 2006년 당 대표 경선당시 조승수 후보에 대한 흑색선거운동, 2006년 지방선거 관련 광주시당 회계부정 사건

[당내 논란이 되었거나 되고 있는 사건]

-서울 노원도봉지구 사건, 서울 강남 지구당 사건(2003), 인천 남동갑지구당 사건(2002), 인천부평을 지구당 사건(2003), 서울 강동을지구당 추진위 사건, 경기도당 복합기 사건(2003), 진보정치와 당기관지 이론과 실천 관련 파동(2005), 대선 경선시 노회찬 후보 동영상 사건(2007), 울산시당 송○○ 문건 사건(2006), 서울 성북갑 부정선거 사건(2007), 울산 활동가 57명이 울산시당 사무국장을 당기위원회에 제소한 사건(2007)

2) 소결

- ① 민주노동당은 이와 같은 정파들의 패권주의 행태가 당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왜곡해 왔음에도 지금까지 이를 바로 잡지 못해온 점을 당원과 국민 앞에 사과한다.
- ② 정파 패권주의와 민주주의 훼손 사건 중 사실관계가 분명히 확인된 사건의 경우 이러한 사건을 발생시킨 관련 개인과 집단, 정파는 당원과 국민 앞에 각 사건의 실상을 밝히고 공개 사과해야 한다.
- ③ 당 공식기구에서 확인되진 않았으나 당원들에 의해 이미 문제가 제기 되었으며 당내에서 논란이 되었던 패권주의, 민주주의 훼손 사건들에 대해서는 그 사건의 진상을 분명히 규명해 위 기준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에 대한 수사외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 ⑤ 추후 다시는 위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파양성화, 선거제도 개선 등 시급한 제도개선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 정파 등록제를 도입한다

[1단계]

- 정파등록제를 도입함. 정파는 핵심 구성원과 입장 등을 중앙당에 등록함으로써 공식적으로 당내 “정파”의 권리와 의무의 행사 주체가 됨.
- 정파 행사는 가급적 전면 개방되어야 하며, 선거출마자 명단 공개, 당 외부 활동 및 발언 규제 등의 의무를 지켜야 함.
- 당은 등록된 공식 정파들에게 당 공간 사용, 당 매체 일부 사용 허용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
- 구체적인 등록정파에 대한 지원방안은 당규로 정한다.

[2단계]

- 보다 높은 수준의 인센티브 제공과 미등록 정파에 대한 패널티 등 2단계 조치는 1단계 조치 시행 후 객관적 평가와 공론화를 통해 결정함.

□ 1인1표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한다.

- 2인 이상을 선출하는 공직후보자(비례대표 후보) 및 당직(최고위원, 중앙위원, 당대회 대의원 등)은 선거권자가 명부별로 1인 1표를 행사한 후 각 명부에 등록된 후보자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한다.

2-3. 재정 혁신 및 조직혁신 방향

1) 재정혁신 방향

민주노동당의 재정은 구조적인 적자상태를 악순환하고 있다. 적자예산 편성이 일상화되어 있으며, 이를 일시적인 타개책으로 봉합해왔던 것이 수년간의 관행이었다. 이러한 적자구조가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대선부채의 급증과 맞물리면서 당이 파산위기에 몰리고 있다. 또한 정당법에 근거한 재정운용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회계문제가 불거지고, 특정 당부에서는 선관위와 검찰의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① 당의 재정은 정당법에 근거하여 투명하게 운영한다.

- 06년 5차 중앙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실질적으로 집행한다.
- 04년 7차 중앙위의 지구당 폐지에 대한 불복중운동을 결정한 것은 당의 회계문제 불투명성을 야기한 근본원인으로 이를 폐기한다.

② 투명한회계와 재정 정상화를 위한 원칙

- 적자예산 편성 관행은 당 재정악화의 원인으로 이를 반드시 시정한다.
- 예산내역을 당원과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한다.
- 예결산 감사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외부 회계사를 반드시 포함시키며, 예결위원 개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면책특권을 부여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한다.
- 중앙당 예결산위원회는 당의 모든 당부에 대해 필요할 경우 감사를 진행한다.
- 중앙당과 광역시도당은 복식부기 프로그램을 통일적으로 실행하며, 예결산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에 공통으로 적용하여 당 회계시스템의 합리와 및 현대화를 실현한다.

- 재정 지출과정에서 중과실이 있는 원인행위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 등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

※ 대선부채 청산 계획 및 구조적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방안에 대해서는 [재정위기 대책 및 상반기 예산안 승인의 건]에서 다룬다.

2) 조직혁신 방향

불투명한 재정운용 및 정치활동 방식의 혁신문제와 연계하여 중앙당과 광역시도당, 지역위원회, 분회로 이루어지는 당의 골간 조직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과 재편 계획이 필요하다. 중앙당의 인력구조를 정예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광역시도당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위원회는 그 역할과 기능을 변화하여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요구된다.

- 지역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당원들의 지역 정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개발, 교육활동, 조직관리에 주안점이 두어지도록 한다. 중앙당은 적정인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서와 부문과제별 위원회의 재정비 방안과 부서별 직제개편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중앙당의 분산된 정책역량을 통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제도정비를 위해 관련 당규개정을 추진한다. 지역위원회 활동과 재정 운용에 대한 광역시도당의 권한을 실질화하고, 당원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당직 및 공직 출마자들의 출마자격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 중앙당의 지도집행체계와 관련해서는 당 내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총선 이후의 당 대회에서 당헌개정과 함께 추진한다.

3. 제2창당 추진 방안 및 방향

- 1) 당내 제2창당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시대대 이후 진보진영의 총선 공동 대응과 통합진보정당 건설을 진보진영에 제안한다.
 - 임시대대 이후 비대위 산하의 평가혁신위원회를 확대 재편하여 제2창당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 제2창당과 관련하여 3월내 진보진영의 정당과 정치조직, 시민사회세력이 함께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 2) 제2창당을 위한 진보진영의 공동 추진 기구를 구성해 나간다.
- 대선 시기 추진했던 진보대연합 연석회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를 더욱 확대해 진보진영의 정당 및 정치조직, 시민사회세력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진보정당 추진기구를 구성해 나간다.
 - 통합진보정당 건설을 위해 진보진영의 정당 및 정치조직, 시민사회세력과 진보가치의 재구성 및 조직 및 정치실천의 혁신 등 5대 혁신 전략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
- 3) 총선 이후의 당 대회에 제2창당 추진경과를 보고하고 구체적인 성사 방안을 제출한다.

[해설 자료]

제2창당 전략 구상 : ‘생활 속의 푸른 진보를 실현하는 대중적 진보정당’

- 1) ‘대중과 괴리된 갇힌 진보’ 를 넘어서
- 대중은 민주노동당을 ‘서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자기들 안에 머물러 있는 정당’ 으로 인식하고 있음. 이에 제2창당은 ‘대중과 괴리된 진보, 자기 안에 갇힌 진보’ 라는 한계를 넘어서야 함.
 - 제2창당에 나선 민주노동당은 기존 진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민의 삶과 호흡하며, 노동 대중, 특히 비정규직을 중심에 두고, 생태·여성·소수자·평화의 가치를 사회 전 영역에서 실현하는 정당이 되어야 함.
- 2) ‘생활 속의 푸른 진보를 실현하는 대중적 진보정당’ 으로 거듭나야
- ① 서민의 삶과 함께하는 ‘생활 속의 진보’
- 생활 속의 진보는 미시적 가계활동으로 한정되지 않음. 생활 속에서 민생, 풀뿌리경제, 생태, 소수자, 여성, 연대, 평화, 인권 등을 찾아 나감.
 - 영역: ‘일자리로 대표되는 민생’,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풀뿌리경제’, ‘인간과 지구를 살리는 생태’, ‘우리의 이웃인 소수자와 함께하는 사회연대’, ‘성으로 인한 차별을 지양하는 성평등 실현’, ‘전쟁과 억압을 종식시키는 평화와 인권’ 등.
- ② 미래를 여는 ‘푸른 진보’ (Young, Green, Dynamic: 영글다)
- 푸른 진보는 신자유주의 좌절을 인생 초기에 체험하는 ‘88만원 세대’ 를 비롯하여

새로운 세대를 진보의 주체로 형성하며(Young),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추구하는 생태 가치를 사회 전 영역에 반영하며(Green), 사회모순을 진단하고 해결하는 능력있는 역동성을 지닌 진보(Dynamic).

③ 운동권으로 닫힌 정당을 넘는 ‘대중적 진보정당’

- 주장에서 소통으로
- 비판에서 대안으로
- 우리끼리에서 함께하기로

3) 제2창당을 위한 5대 과제

① 평가: 기존 당활동의 오류와 한계에 대한 엄정한 평가

- 오류: 과거 편향적 친북 이미지, 정규직 노동자 대변 이미지, 당내 민주주의를 왜곡한 정파 패권주의, 대중과 소통하지 못한 닫힌 정치활동 등의 오류
- 한계: 21세기 진보주의가 실현해야 할 생태, 여성, 평화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지 못한 한계

② 노선: 진보주의 노선의 확장

- 기존 자주와 평등으로 집중되어 있는 진보주의 노선을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적극 통합하는 방향으로 확장해서 ‘생활 속의 푸른 진보’로 나가야.

③ 주체: 진보주의 주체의 형성

- 신자유주의 시장만능주의의 폐해가 심화됨에 따라 이를 비판하고 대안을 마련하려는 진보운동의 결집이 중요.
- 민주노동당의 제2창당은 당내 다양한 흐름뿐만 아니라 당외 진보정치세력, 녹색정치세력, 시민사회세력 등을 아우르는 진보대통합을 통하여 주체를 새롭게 형성해 나가야.

④ 조직: 진보주의 조직의 혁신

- 진보주의는 ‘이상적인 말’로서 검증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진보정치를 실현할 수 있어야. 이를 위해선 진보정당의 조직체계의 혁신이 요구됨.
- 원내/중앙당의 유기적 관계, 중앙당/지역조직의 소통, 진보적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당 조직체계를 전면 혁신해야. 중앙은 미래 수권조직으로 예비내각체제(Shadow Cabinet)를 토대로 하고, 지역은 진보적 지방자치 실현하는 풀뿌리조직이 되어야.

⑤ 실천: 대중과 소통하는 사회적 연대전략

- 진보주의는 다수 대중의 지지를 얻어야만 성공할 수 있음. 소위 활동가 위주의 ‘운동권적 방식’을 지양하고 대중과 소통하는 활동방식을 체화해야 하며, 사회구성원의 연대를 확장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연대전략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제 18대 총선방침 및 비례대표후보 선출 방안

■ 주문 사항

18대 총선방침과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 선출방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십시오.

1. 제18대 총선 방침

1-1. 총선 기조

- 민주노동당은 17대 대선 패배를 딛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18대 총선 승리로 제2창당의 초석을 마련 한다.
- 민주노동당은 과거의 낡은 진보와 단절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생활속 진보, 평화와 생태 가치를 분명히 하는 진보로 당의 면모를 일신해 총선을 돌파 한다.
- 민주노동당은 총선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악육강식의 시장주의에 맞서 서민경제와 사회공공성을 수호할 강력한 진보야당으로 거듭난다.
- 민주노동당은 작지만 강한 정당으로 이번 총선을 통해 무능한 국정실패 세력을 대체하는 중심야당-대표야당으로 자리 잡는다.

1-2. 총선 목표

- 정치적 목표

- . 원내교섭단체 실현으로 대한민국 대표야당의 위상 확립
- . 이명박정부의 폭주를 견제하는 야당다운 야당
- . 당의 변화와 혁신, 진보대연합 추진으로 총선승리

○ 조직적 목표

- . 민주노동당 재도약과 제2창당의 기반 구축
- . 88만원세대의 젊은 진보정당
- . 전략지역 육성으로 거점 지지기반 확보
- . 다양한 진보가치 실현으로 당의 외연 확장
- . 비정규직, 농어민, 사회적 소수자의 정당으로 거듭남

1-3. 후보방침

- 당선과 전략 거점구축을 목표로 최대한의 후보를 출마시킨다.
- 진보적 가치실현을 위해 상징적 후보를 지역과 비례대표로 출마시킨다.
- 3월초까지 지역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한다.
- 18대 총선을 통해 당을 이끌어갈 새로운 인재를 양성한다.

1-4. 경과 규정

- 여성할당 등 상징적 후보의 발굴과 선거구획정 지연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선거 전 30일 전 후보선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총선 전 중앙위 개최가 어려울 경우, 총선후보 인준권한은 비대위에 위임한다.

※ 제18대 총선 관련 일정 (참고자료)

- 총선방침안 확정 : 2/ 3일(일)
- 중앙당 선대위체제 전환 : 2/11일(월)
- 후보 선출 완료 : 3/ 6일(목)
- 중앙선거대책위 출범식 : 3/ 8일(토)
- 총선후보자 법정등록 : 3/25일(화)
- 선거운동 : ~ 4/ 8일(화)
- 투표 및 개표 : 4/ 9일(수)

2. 18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선출 방안

2-1.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선출 방안

- 대선 패배의 아픔을 딛고 당내 정파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변화. 혁신의 의지를 담아 18대 총선에 한해 비례대표선거에서 ‘전략명부’를 도입한다.
-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의 선출정수는 20명으로 하고 이 중 1~8번, 19번, 20번을 전략명부로 한다.
- 9번~18번까지의 일반명부, 여성명부, 장애인 명부(12번)는 명부별로 후보자등록을 받아 명부별로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순으로 각 명부를 확정한다.(⇒당규 개정 사항)
- 1~8번, 19번, 20번의 전략 명부는 일괄하여 전체명부에 대한 당원 찬반 투표로 확정한다. 단, 전략명부 후보의 경우 입당한 날로부터 공직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당규 부칙 신설 사항)
- 일반명부, 여성명부, 장애인 명부에서 최종 확정된 명부가 18번에 미달할 경우 전략명부 19번, 20번 후보의 순번을 앞 순번으로 단계적으로 당길 수 있다.

2-2. 전략명부 기준과 작성 방안

- 전략명부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최일 선에서 당의 가치와 정책을 국민들과 소통해야 함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한다.
 - 이명박 정부에 맞서 서민경제와 사회공공성을 수호할 예비내각(Shadow Cabinet)의 역할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실천적 능력이 검증된 분으로 신자유주의에 맞서온 진보적 실천 단위들과 정책적, 조직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계기로 삼는다.
- 전략명부 작성을 위해, 비대위 산하에 사회적으로 신망 받는 5인 내외의 인사로 구성된 비례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비례후보 추천위원회는 당원과 국민, 진보진영 단체들로부터 후보 추천을 받아 이를 심사 검증하여 전략명부를 작성한다.

3. 관련 당규와 선거 일정

위 방침이 승인되면 다음의 당규는 자동 개정된 것으로 본다.

□ 당규 24호(선거관리규정) 중 40조(선출방식)5항 개정

- ⑤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장애인명부, 여성명부, 일반명부로 구분하여 등록하되, 선거권자가 장애인명부 1표, 여성명부 일반명부에 각 1표를 행사한 후 각 명부의 다 득표자 순으로 각 명부를 작성한다.

□ 당규 제24호(선거관리 규정)부칙 신설

- 부칙 제5조 (전략명부후보 입당 특례) 위의 15조(선거권), 16조(피선거권) 규정과 당규 제4호(당비규정) 제2조(일반당비)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8대 총선 비례후보선출을 위한 전략명부 후보는 입당한 날로부터 공직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 부칙 제6조(전략명부 선출방식) 위 제27조(후보자등록) 6항④호와 제40조(선출방식)5항에도 불구하고 2008년 총선에서 전략명부 작성을 위해 비례후보추천위원회가 제출한 전략명부는 전체에 대한 당원 찬반 투표로 확정한다.

※ 비례후보 및 중앙위원-대의원 선거 일정(안)

- 선거 공고 : 2/ 4일(월)
-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 : 2/ 8일(금)
- 선거인 명부 작성 및 송부 : 2/11일(월)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 2/14일(목)
- 선거인 명부 확정 : 2/15일(금)
- 후보 등록 : ~ 2/21일(목)
- 선거 운동 : ~ 3/ 1일(토)
- 투표 기간 : ~ 3/ 6일(목)

[참고 자료1] 전략명부 관련 사항 및 당헌당규

1. 전략명부 관련된 중앙위원회(2008.1.12) 결정사항

4. 비례대표 선출

- 당 활동의 중요한 질곡으로 작용해온 정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8대 총선에 한하여 비례대표선거에서 전략공천을 대폭확대하며, 이에 대한 방침마련을 비대위에 위임한다.
- 비대위는 전략공천에 관한 방침 및 방안을 당 대회에 승인받아 집행한다.
- 비대위는 당대회의 승인에 따라 전략명부 후보를 추천하여 당원 총투표를 거쳐 확정한다.

2. 비례대표 후보 관련 당헌 사항

□ 당헌 제2장(당원) 제6조(당원의 권리와 의무)

① 당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당헌·당규가 정하는 당직 선거권과 피선거권

□ 당헌 제8장 공직선거, 제46조 (국회의원 후보)

① 국회의원 지역구후보는 당해 선거구의 지역위원회 당원의 직선으로 선출한다.

②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는 당원직선으로 선출하고, 여성에 50%이상, 또한 장애인에 10%이상 할당한다.

③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선거관리와 선출방식 등 국회의원 후보 선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3. 비례대표 후보 관련 당규 사항

□ 당규 제4호 당비규정, 제2조 (일반당비)

③ 당비관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당원은 당직, 공직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당원총회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

1. 당권 행사 전달부터 12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3개월 이상인 당원

2. 당원으로 가입하고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당원

□ 당규 24호 선거관리규정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5조 (선거권)

① 당원이 당의 각급 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제23조 제1항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당규 제4호 당비규정 제2조 제3항에 의한 당권을 가진 자

제16조 (피선거권)

① 당의 각급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외에 공직후보자선거의 경우 해당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중앙위원회가 추천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의 후보자의 경우에는 제14조

1항 1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제7장 후보자 등록, 제27조 (후보자 등록)

④ **후보자 등록신청**은 부문(최고위원의 경우), 일반과 여성으로 나누어 하여야 한다.

제9장(투표), 제40조 (선출방법)

⑤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장애인명부, 여성명부, 일반명부로 구분하여 등록**하되, 선거권자가 **장애인명부 1표, 여성명부 일반명부에 각 2표를 행사**한 후 각 명부의 다수득표자 순으로 각 명부를 작성한다.

※ 부칙 4조(제18대 총선비례후보 비정규직 노동자 후보 명부 및 투표에 대한 특례)

당규 24호(선거관리규정) 9장(선출방법) 40조(투표) 5항에도 불구하고 2008년 18대 총선비례후보 선출의 경우 비정규직노동자 명부를 별도 신설한다.

선거권자가 비정규직 노동자 명부에 1표를 행사한 후 다수 득표자에 대하여 정당명부의 2번에 순번을 부여한다.